

[별첨 2]

경실련 20대 총선 정책질의 답변 종합

1. 경제분야

1. 소수의 지분으로 그룹전체를 지배하는 순환출자는 신규 순환출자 외에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강제적 해소 법 규정 도입에 따른 경우는 반대, 지주 회사 전환, 공시 및 공개 등 시장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 유도
더불어민주당	찬성	소유와 지배의 괴리 개선 및 경제력 집중 억제 필요
국민의당	반대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공시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재벌그룹이 순환출자를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입법은 불필요함
정의당	찬성	순환출자를 통해 연결된 계열사는 부당지원을 통해 재벌총수가 적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의 자산을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이전,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만들어진 가공자본을 통해 기업용자를 더 받음(부패 및 배임). 경영악화시 도미노 연쇄부도 우려.

2.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현재 200%에서 100%로 강화시켜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지주회사 규제강화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단순·투명한 소유구조인 지주 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
더불어민주당	찬성	대기업집단 전체의 부실화 예방 및 경제력 집중 억제 필요
국민의당	찬성	지주회사 체제가 지배권 강화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최초 제도 도입 당시의 기준들로 환원하여 지배권 강화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정의당	찬성	지배주주의 지배력확장과 사익추구라는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극복 해야 함.

3. 기업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는 제도도입 당시처럼, 자회사 지분을 상장회사는 최소 30%, 비상장회사는 최소 40%를 보유하도록 정상화해야 한다.
--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지주회사 규제강화는 기업의 부담의 가중시키고 단순·투명한 소유구조인 지주 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
더불어민주당	찬성	소유-지배괴리 축소나 경제력 집중 억제 필요, 주주간의 이해충 방지 필요
국민의당	찬성	지주회사 체제가 지배권 강화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최초 제도 도입 당시의 기준들로 환원하여 지배권 강화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정의당	찬성	재벌의 지배력확장에 따른 기업지배 피라미드 구조를 해소해야 함.

4. 금융산업이 대주주의 사금고, 계열사에 대한 지원에 악용되지 않도록 금융계열사와 일반계열사,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를 완전 분리하도록 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금융지주와 일반지주의 분리규제로 금산복합 기업집단의 지주체제 전환이 곤란하여 순환출자가 발생하는 등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어려운 실정임. 금산복합 기업집단의 계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상호 출자금지를 통한 금산분리를 위해서는 금융지주와 일반지주의 완전분리 보다는 중간금융지주제 도입 등 조화로운 방안을 모색함이 타당
더불어민주당	찬성	편법이 난무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대주주의 전횡 방지와 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
국민의당	반대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그룹에게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할 수 있음.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대응책은 금융복합그룹 감독강화 등 별도로 마련할 수 있음
정의당	찬성	현재 15개 재벌그룹은 지주회사 없이 100개가 넘는 금융계열사 보유하고 있음. 금산분리의 원칙만 잘 지켜지더라도 현재의 재벌지배구조는 상당부분 개혁될 것임

5.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액을 최대 3배로 적용하는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을 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민법상 실손배상 원칙과 부합하

		지 않아, 도입 실익이 큰 분야(하도급법 4대 불공정 행위, 대리점법 불공정행위)에만 극히 예외적 도입 필요
더불어민주당	찬성	소비자와 피해기업 등의 보호를 위하여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공정거래법 전반으로 확대해야 손해배상액도 더 늘릴 필요 있음
국민의당	찬성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특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할 수 있음
정의당	찬성	현행제도는 소송을 해도 피해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보상 받기가 매우 어려움. 대부분의 소비자피해 사건에서 소비자가 승소한 경우가 드물다는 것도 현행 제도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줌. 설사 소비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 해도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제도적 한계로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에는 실효성이 없음. 이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가 도입되어야 함

6.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활용되는 계열사간 내부거래는 분리 선출된 감사위원들의 과반수 의결을 통해서만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신중검토)내부거래에 대한 기업의 자율규율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업 경영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경영권의 과도한 제약 우려 등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자체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리 선출된 감사위원의 내부거래 승인의 무화를 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
더불어민주당	기타	재벌총수의 전횡방지와 사익편취행위 및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원칙적으로 찬성. 다만 의결정족수의 적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학계 등의 논의 수렴 필요
국민의당	찬성	이사회가 내부거래에 대해 감독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정의당	찬성	부당한 계열사간 내부거래는 시장의 정당한 거래행위를 왜곡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막아주는 주범임, 따라서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감사위원들의 엄격한 통제가 이뤄져야 함.

7. 관련 매출대비 0.05%의 특허수수료만 납부하면 수조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시내 면세점 사업은 주파수와 같은 경매방식(가격경쟁)으로 변경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면세점 수수료가 낮으므로 적정화할 필요성은 인정하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에 대한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을 고려할 때 면세점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될 필요. 따라서, 특허수수료를 인상, 부분 경매 방식 도입 등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	기타	통신사 주파수 할당과 같은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는 없을 것이나, 합리적인 범위에서 매출액 대비 1% 범위내에서 특허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특허산업의 성격상 타당할 것으로 보임
국민의당	기타	내부 논의된 바 없거나 결정된 사항이 없음
정의당	찬성	면세점은 국민자산인데 제한된 자원을 재벌이 독점하여 황금알을 낳고 있음. 따라서 면세 다른 소비자 편익을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허가를 경매방식으로 해야 함.

8. 소비자피해액이 큰 기업의 중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집단소송제를 도입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찬성	공정거래분야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담합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서 도입하되, 실제법인 공정거래법보다 절차법인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안(박민식 의원, 법사위 계류 중)
더불어민주당	찬성	소비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
국민의당	찬성	피해자의 직접적인 구제수단의 도입이 필요함
정의당	찬성	기업담합이나 제조물책임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현재의 민사소송으로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들의 권리실현이 어려움. 소비자 집단에 한정하여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표소송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도록 해야 함.

9. 주주권리 확보를 위해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의 의무화는 경제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더불어민주당	찬성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소수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도도입 필요
국민의당	찬성	주주총회가 보다 많은 주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정의당	찬성	소수주주가 독립적인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 보완이 필요함. 전자·서면투표제 등 외부(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재벌대기업 계열사는 대부분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으며, 전자투표제도 채택하지 않고 있음. 이를 의무화해야함.

10. 과거와 같이 재벌그룹 자산순위 10대 또는 30대 그룹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자산순위 기준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시 타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에 의해 규제여부가 결정되는 등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자산규모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 (위와 같은 이유로 '02년 대기업집단 지정방식을 자산순위 기준에서 자산규모 기준으로 변경)
더불어민주당	찬성	10대나 30대 등 자산 순위로 제한하기 보다는 현재와 같은 자산 규모를 중심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하고, 현행 제도하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봄
국민의당	기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고 있는데, 경제규모 및 기업규모의 상승으로 인하여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정의당	찬성	30대기업집단지정제도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증권투자신탁업법 등 기업·금융관련 법률에서 준용되고 있는 재벌개혁 정책의 큰 틀임. 30대기업집단에공정

		거래법상 계열회사간 상호출자금지, 신규채무보증금지, 출자총액제한,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등의 규제를 해야 함.
--	--	--

11. 대기업의 임원 연봉 공개를 등기이사 뿐 아니라 비등기이사로 확대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비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보수총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공개하기로 자본시장법을 既개정
더불어민주당	찬성	지난 2월에 법을 개정하여 등기와 비등기 구분없이 상위 5명에 대하여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음
국민의당	기타	2016년 3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 이미 미등기이사라도 기업 내 최고연봉자 5인이라며 공개하도록 하였음
정의당	찬성	2013년 임원 연봉공개 도입 이후 2년 만에 30대 그룹 중 9개 그룹 총수가 등기 임원 명단에서 빠졌다. 총수가 등기 임원으로 등재된 계열사는 108개에서 78개로 30% 감소함.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본시장법의 임원연봉공개제도를 보완해야 함

12. 재벌의 편법 및 위법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현행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의 실질적 수혜자인 지원 객체에게도 부당지원을 받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규정 마련, 시행 중(법위반시 관련 매출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더불어민주당	찬성	개벌의 경영권 불법승계과 조세포탈 등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재발 방지책 마련 필요
국민의당	찬성	주주대표소송 활성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증권집단소송 활성화를 공약하였음
정의당	찬성	현행 과징금 제도는 담합 역지력 떨어지고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 없어 징벌적 성격 아닌 부당이득 환수 성격으로 제도 정비하고 피해자 기금 도입해야함

13. 계열사 주식증여 면세를 통해 재벌의 편법승계에 악용되는 성실공익법인 제도
--

는 폐지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성실공익법인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경우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 따라서, 공익법인 출연 주식 이 편법승계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보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더불어민주당	찬성	성실공익법인제도의 계열사 주식증여 면세를 통한 부당한 지배력 확장등 제어 필요성
국민의당	기타	성실공익법인 제도 폐지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야 함
정의당	찬성	공익법인제도는 공익사업을 활성화하고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증여세면제 등 각 종 세제혜택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음. 그런데, 현실에서는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이러한 세제혜택에 편승하여 공익법인제도를 공익사업보다는 계열회사 주식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편법 상속·증여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성실공익법인제도는 폐지해야 함.

14.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추진되면 안 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동 건은 '15.12.1일 날 미래부에 접수되어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과 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보호, 산업적 측면, 미디어 다양성 · 보편성 등 방송의 기본 규범 목표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서 심사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당이 인수합병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봄
더불어민주당	기타	합병으로 인한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공존함. 충분한 검토와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결론 도출 필요
국민의당	기타	내부 논의된 바 없거나 결정된 사항이 없음
정의당	찬성	재계 5위이며 이동통신 업계 1위의 지배적사업자 SK텔레콤이 유료케이블 방송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은 이동통신과 유료케이블 시장을 대표하는 두 공룡이 합병하는 것이며 그 파장은 합병절차의 합법성 여부를 떠나 방송통신 생태계 전체를 공멸로

		물고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	--------------------

15.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출자비율을 규정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 도입 되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의 투자여력 저해, 외국기업의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력 저하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음. 출자총액제한제도로는 대기업집단이 적은 자본출자로 중소기업영역에 침투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막을 수 없어 실효성은 크지 않은 반면, 미래성장 산업에의 투자 등 기업의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 출자를 제한할 우려 등 부작용이 큰 만큼 재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더불어민주당	기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지만,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이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룬후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국민의당	반대	재벌이 예전과 같이 문어발식 확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출총제의 실효성은 실패한 정책으로 판단함
정의당	찬성	출총제는 예년에 폐지되었는데 출총제의 도입은 재벌대기업이 내부 역량 강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나 기술개발투자 등에 노력해야하는 취지이므로.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계열사에게 적용하도록 해야 함

16.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하여 금융계열사와 일반계열사를 원천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금융계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일반계열사 또는 대주주와의 거래는 금융 관련 법령상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금산분리를 위한 목적으로 계열분리명령 제를 도입할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기타	독과점기업에 대한 기업분할명령제를 도입할 것이나,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계열분리명령제는 논의된 바 없음
정의당	찬성	계열분리명령제는 출총제 도입을 하지 않을 경우 도입해야하는 재벌 정책의 핵심임. 기업결합에 대해 사전 심사 하듯이 이미 커져버린 기업집단은 분리할 수 있

		는 것임.
--	--	-------

17. 유통산업발전법 상 유통업체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상권영향평가서는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 제도 상 공공기관인 행정기관(기초지자체)에서 상권 영향평가서를 검토 및 심사하므로 공정성 확보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필요시 전문기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 등을 거쳐 심사가 가능 하므로 전문성 확보도 가능함
더불어민주당	찬성	
국민의당	찬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함
정의당	찬성	재벌·대기업의 대형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반경 10km 인근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평균 50%(음식업종은 78%) 이상 급감해 고사위기에 처해 있음.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복합쇼핑몰과 대규모 아울렛을 계속 출점할 계획이라는 점임. 이 때문에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대형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등의 출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상권영향평가서도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작성토록 한 후 허가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함.

18.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으로 부터의 거리제한 등 규제를 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현행 유통법(제8조 제3항)에 의해서도 전통시장으로 부터 1km 이내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는 복합쇼핑몰 또는 아울렛(대규모점포에 해당 될 시)에 대한 등록제한이 가능함
더불어민주당	찬성	
국민의당	찬성	전통시장의 상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임
정의당	기타	전통시장과 골목슈퍼의 낙후된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방치한 채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인들 자신들도 협동조합을 통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 시설현대화, 물류현대화, 전산화 등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식의 육성책과 병행해야 함.
--	--	-----------------------

19.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적합업종 대상은 제도 시행 초기('11)에는 제조업 중심이었으나, 이후도.소매업 등 서비스 품목까지 既 확대함(적합업종 신청대상 제한없음)
더불어민주당	찬성	
국민의당	찬성	중소기업적합업종은 외국기업의 진출 확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확대되어야 함
정의당	찬성	이른바 3대 생계형서비스 또는 전통서비스업(도매 및 소매, 숙박 및 음식업, 수리 및 기타개인 서비스), 제과점, 음식점업, 자동판매기, 커피전문점, 인테리어, 자동차 수리업, 꽃배달, 계란소매, 자전거 소매, 식자재유통, 입시학원 등 적합업종 대상 서비스업종 633개에서 불과 18개 업종에 대하여 적합업종을 지정했음.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함.

20. 현행 금융감독기구를 전문성·독립성·중립성이 확보되는 공적민간기구로 개편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민간기구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책임성, 민주적 정당성 등에 문제 소지
더불어민주당	기타	전문성·독립성·중립성 확보에는 공감하나, 이를 실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함.
국민의당	찬성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기능을 분리해야 함
정의당	찬성	현재 통합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상황은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사이에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전문성,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한 금융감독기구를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으로 나누어서 감독할 기구로 개편해야하며 이럴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21. 인터넷전문은행 또한 예외 없이 은산분리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분을 4%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기존 은행과 달리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적인 IT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 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미국, 일본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도 텐센트, 알리바바 등 I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 은행 출현
더불어민주당	찬성	인터넷 전문은행이 꼭 시중은행 기반으로 출현할 이유는 없으며, 지방은행·저축은행 등의 형태로도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판단함
국민의당	찬성	인터넷은행도 금융기관이므로 예외를 적용해서는 안 됨
정의당	기타	인터넷 전문은행 또한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분 규제를 강화해야 함.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중금리 대출시장이 활성화 될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초기 시장안착을 위해서는 10%이내가 적절하다고 봄

22.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여 대출을 규제토록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는 LTV·DTI 규제 합리화 외에도 저금리, 전세값 상승, 주택시장 정상화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 → 냉·온탕식 직접 규제 변경보다는 질적 개선노력과 연착륙 필요
더불어민주당	찬성	현 정부가 ‘규제 합리화’ 명분으로 LTV·DTI 규제를 완화한 결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견잡을 수 없을 만큼 빨라졌음. 구조개선과 더불어 완화시켰던 총량 규제를 원상회복 시키는 정책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판단함
국민의당	기타	내부 논의된 바 없거나 결정된 사항이 없음
정의당	찬성	12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 우려됨. 주택담보대출의 약탈적 대출을 청산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

		율 (DTI) 규제를 시행령이 아닌 법제화 해야함. 부동산 경기에 따라 DTI 제도의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됨
--	--	--

23. 법인세는 인상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투자·고용 위축을 유발하여 경기회복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국제적인 조세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요 선진국들도 법인 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에 역행. '12년 이후 최저한세율 인상 등 지속적인 대기업 감면 축소정비를 통해 세율인하 효과 상당부분이 이미 상쇄됨
더불어민주당	찬성	수입금액 500억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원상회복(22%→25%)은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음. 더 변만큼 더 내는 세금 관행 구축 및 한국의 법인세 수준이 OECD평균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지 않음
국민의당	찬성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세출예산 조정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후 시행
정의당	찬성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는데 비해,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정의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은 MB 감세 이전인 25%로 환원해 연간 8조원의 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24. 가업상속제도의 적용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성공적인 가업승계는 기술 경쟁력 유지 및 향상, 안정적 고용유지, 장기적 투자와 신규 일자리 창출, 장기적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므로 가업상속의 적용대상을 확대(선진국의 장수기업은 가업 상속을 통한 가족기업이 많으며, 히든챔피언이 가장 많은 독일의 경우 가족기업은 300만개로 전체 중소기업의 95%를 차지하며 독일 기업 전체 매출액의 42%, 고용의 57%를 차지)
더불어민주당	찬성	가업상속제도의 본래취지와 달리, 매출액 규모도, 상속공제 규모도 확대된 점, 이것이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

국민의당	찬성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지나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축소해야 함
정의당	찬성	2008년 이후 가업상속공제는 거의 매년 확대되어 왔습니다. 제도변경의 필요성이 확인되지도 않은 채 대상 기업과 공제액은 확대되었고, 공제요건은 완화되어왔습니다. 사주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의 대물림을 눈감아주는 상속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25. 종교인 소득을 일반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15년 정기국회에서 종교인소득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종교인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수준의 세부담이 되도록 제도가 마련되었고, 종교인이 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
더불어민주당	기타	교인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지난 해 여·야간 합의하였는 바, 합의 취지 존중
국민의당	찬성	조세의무는 국민의 의무이며 세금은 예외조항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
정의당	찬성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 의무도 강제하지 않은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납니다. 국민개세주의에 의한 조세형평과 재정투명성 확립을 위해 똑같이 근로소득세로 과세해야 합니다.

26. 현행 2000만원 인 금융소득 과세 기준을 폐지하고 완전 종합과세를 실시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한 분리과세(단일세율) 적용을 없애고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누진세율) 적용시 → 저금리 기조하 국민들의 금융자산 형성 및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는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금융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누진세율)으로부터 별도로 분류하여 낮은 세율(단일세율)로 과세)
더불어민주당	기타	법적안정성등 고려, 1,000만원으로 종합과세한도인하

		고려
국민의당	찬성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원칙 유지가 필요함
정의당	찬성	전체 금융소득자의 0.3%인 13만명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입니다. 정의당은 우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원으로 1천만으로 낮추고 단계적으로 폐지해가겠습니다.

27. 연간 2000만원 이상 주택임대소득자에게 주택 보유 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14%). 연간 2000만원 이하 비과세 적용 중인 임대소득은 예외없이 모두 과세 해야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17년부터 연간 2000만원이하 임대소득도 비과세에서 분리과세(14%)로 전환됨. 현재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도 기준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기타	원칙적으로 임대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하나, 지난 2014년도 주택임대소득과세방안에 대해 여·야합의한 바 있고, 주택임대소득세 과세는 순차적·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국민의당	찬성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원칙 유지가 필요함
정의당	찬성	정의당은 현행 3주택자 이상에게만 적용되는 전세소득 과세를 확대하고, 월세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폐지하겠습니다. 동시에 임대차등록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28. 슈퍼리치 과세를 위해 소득세 최고 과세 표준을 상향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11년 세법개정시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인상한데 이어, '13년에는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에서 '1.5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였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을 통해 그간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음. 소득세 최고세율(38%)은 OECD 회원국 평균(36%) 보다 높은 수준으로 과세 강화는 근로·저축 의욕을 저해하고, 탈세 유인을 높일 수 있으며, 소비

		등 내수경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더불어민주당	기타	슈퍼리치 과세 강화의 원칙적인 입장에 대해 동의하나, 슈퍼리치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치한 논의가 필요
국민의당	찬성	세수확보와 고소득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정의당	찬성	OECD 국가 중 동구권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40~5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최고세율이 낮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집니다. 정의당은 소득세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최고세율 45% 구간을 신설해 연간 3조 5천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하겠습니다.

29. 주식거래를 거래할 때 마다 거래대금의 0.3%를 부과하는 상장주식 거래세를 인상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증권거래세율 인상은 주식시장의 거래비용을 증대시켜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자본의 국제적 이동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음
더불어민주당	반대	주식 거래세보다는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옳고, 거래세 인상은 주식거래위축 등 부작용이 존재
국민의당	반대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강화가 우선이며, 거래세 인상은 반대함
정의당	기타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양도차익과세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의당은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뉴진세율 적용과 과세대상 확대를 통해 금융과세를 정상화하겠습니다.

30.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분율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되는 대주주에게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을 20%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수준인 38%로 상향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주식 양도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과 달리 이동성이 매우 높은 자본을 원천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부분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기타	점진적 인상 고려
국민의당	찬성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찬성함
정의당	찬성	정의당은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을 10억 이하로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일반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처럼 누진세율을 적용할 것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31. 고배당주식 주식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이하 적용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선택적 분리과세 25%로 허용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폐지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고 가계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시행 첫 해의 성과 및 기업들의 배당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
더불어민주당	기타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시행 성과가 나타나는 2016년 경과를 지켜보고, 상장법인의 대주주(재벌)등에게 과도한 소득 귀착효과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 필요성 검토
국민의당	찬성	부자 감세인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환원해야 함.
정의당	찬성	2014년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10대 주식부자들에게 187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기업들이 배당을 늘린다고 해도, 그 혜택은 고액의 금융자산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제2의 부자감세입니다.

3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가 17% 단일세율로 부과되는 특례를 폐지하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을 과세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17% 단일세율)는 해외 우수인력 및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올해 적용기한이 도래하므로 효과성·타당성 등을 심층평가한 후 그에 따라 제도 유지 및 개정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

더불어민주당	기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는 내국인과 비 해 형평성에 반하는 점이 존재하는 바, 제도 개선 필 요성 있다고 보임
국민의당	찬성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함
정의당	찬성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도 소득에 따라 동일하게 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또한, 외국법인 에서 파견나온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특혜도 없어야 합니다.

33.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가공식품에 포함된 재료의 원산지를 예외없이 표시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p>① 가공식품에 포함된 모든 원료에 대하여 예외없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할 경우 과도한 표시대상 확대 에 따른 원산지 표시 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 음</p> <p>② 포장재에 원산지표시가 너무 많아져 가독성 저하 및 식품 등 관련 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p> <p>③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대상인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어 표시의 실익이 없음</p> <p>※ 현행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표시 대상은 원료의 배합 비율에 따름(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1호)</p> <p>가.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p> <p>나.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 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p> <p>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p> <p>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중 고춧가루(고춧가루가 포함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고춧가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를 제외한 원 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p>

		원료와 고춧가루
더불어민주당	찬성	국내산과 구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먹거리 안전을 지키고, 이를 위해 예외 없이 원산지표시 필요
국민의당	기타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할 것을 공약하였음
정의당	찬성	정의당은 원산지 표시를 동의하며, 나아가 GMO와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완전표시제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34. 원산지표시제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찬성	원산지표시법 제6조를 위반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으나, 법률상 상한에 비하여 실제 벌금형 처벌은 낮아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부당이득 환수를 위하여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자에 대하여 위반금 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법이 개정되었으며, '15.6.4.부터 시행되었음 -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형량 및 벌금 하한을 정하여 처벌 실효성을 높일 필요
더불어민주당	찬성	먹거리 안전을 위해 필요, 상습범에 대한 '형량 하한제' 도입도 필요
국민의당	찬성	먹거리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강화를 공약하였음
정의당	찬성	정의당은 원산지표시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부당이익에 대한 처벌 강화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35. FTA 비준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약 1조원 규모로 여·야·정 합의로 구성된 FTA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 예산 및 결산 보고 의무화 등 법제화를 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FTA 상생협력기금은 향후 10년 간 1조원을 조성하

		기로 합의하였고, 기금은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간기업, 공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또한, 한-중 FTA 여야정 합의('15.11.30) 후속조치로 정부에서 농어촌상생 협력기금 신설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 동 기금은 FTA로 인해 수익을 얻는 수출기업이 아닌 민간기업, 공기업, 농 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조성되는 기금으로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민간기금이라는 점에서 예산 및 결산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음
더불어민주당	찬성	1조원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농어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이도록 감시감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제화 하는 것이 타당함.
국민의당	찬성	무역이득공유제 도입하여 공유이익을 농수산업 인프라 개선에 투자할 것을 공약하였음
정의당	기타	정의당은 자발적인 기금 형태보다는 FTA로 인해 이익을 보는 기업으로부터 이익의 일부를 조세나 준조세(부담금)로 환수해 농어업 등의 피해를 보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36. 농산물의 가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인 농업 직불제를, 농촌·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는 성격의 직불제로 개편하고 현행보다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직불제를 확대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직불금 지원에 대한 납세자의 공감대를 확보할 필요성에는 공감. 그러나, 경영안정을 위한 직불제의 경우에도 무조건 축소·폐지하기 보다는 도입 취지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
더불어민주당	찬성	찬성함. 다만, 직불제 개편이 지급금액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개악될 소지가 있으므로 경계할 필요가 있음
국민의당	기타	직불제에 대한 내부 논의된 바 없거나 결정된 사항이 없음. 하지만 쌀 소비촉진, 수매량 확대 등으로 쌀값 안정, 농업 등의 정책자금 금리를 1.5%로 인하를 공

		약하였음
정의당	찬성	정의당은 농촌과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해 논 고정직불금은 1ha당 100만원에서 150만원 이상으로, 밭 고정직불금은 40만원에서 8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직불제를 확대해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업과 농촌을 지키겠습니다.

37.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최저가격 보장은 재배면적 확대 등 공급과잉 구조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고, 농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체계적 수급관리를 통해 농산 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소득안정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생산안정제 도입,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등 사전-자율적 수급역량을 강화해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밭 고정직불금 확대, 수입보장보험 도입으로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농가 소득감소 위험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 필요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로 풍년·흉년일 경우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대책, 더불어민주당 20대 총선 공약임.
국민의당	기타	최저가격보장제에 대한 내부 논의된 바 없거나 결정된 사항이 없음. 하지만 5대 민간품목(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가격 안정 정책(지역별 생산면적 할당, 할당제 준수 시 인센티브 지급 등)을 공약함
정의당	찬성	정의당은 기초농산물에 대해서는 품목별 생반비를 반영한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출하조정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또한, 농업생산의 특성을 감안해 곡물류부터 국가수매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8. 농어촌 인력 수급을 위해 청년 귀농, 귀촌, 귀향에 대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기본소득제는 성별, 나이, 지역 등에 관계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일정금액을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납세자인

		국민의 의견수렴 등 절차가 필요할 뿐 아니라,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는 형평성 문제, 제도 운영 필요성 및 지급 기준, 대상, 지급액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국가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조성 등 여건이 조성된 이후 검토가 가능한 사항임
더불어민주당	찬성	귀농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위해 필요, 농식품부는 2016년부터 청년 귀농인에게 월 80만원, 24개월 한도로 지급하고 있음
국민의당	기타	내부 논의된 바 없거나 결정된 사항이 없음
정의당	기타	정의당은 매년 신규농업인력 5천명 육성을 목표로 새로운 농사를 시작하는 후계농업인들에게 최대 3년간 매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취업농지원제도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이 작은 땅에서 특산물을 출하하고 인터넷을 통해 주로 판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위탁상장수수료 부담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9.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제한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상시적 업무라 하더라도 시장수요에 따라 일자리가 늘고 줄어드는 변동이 있어 상시 업무에 대한 개념 정의 자체가 어렵고 사회적 합의 도출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만 초래할 우려가 큼. 오히려 고용경직성 강화로 산업 경쟁력 약화 및 고용총량이 감소되는 등 부작용 우려가 있고 외주화 등을 통해 더 열악한 일자리가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 현행 법.제도를 유지.보완하면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 이행, 고용 안정성 제고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민간의 정규직전환 지원 확대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라고 판단됨
더불어민주당	찬성	국제기준 및 헌법 등 국내규범은 '직접고용의무'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특히,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규모는 OECD 평균에 비해 2~3배 많은 규모로 비정규직의 입구를 제한해야 함

국민의당	찬성	비정규직의 남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점진적으로 시행하여 노동시장에 대한 충격 최소화
정의당	찬성	상시 지속업무 정규직 전환은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음.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가 2년 이상 상시 지속업무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뜻이지 계약기간만 연장하여 비정규직으로 지속적으로 일하게 하라는 게 아님. 비정규직 규모가 여전히 전체 노동자자의 절반 가까이 됨.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제조업은 위축되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서비스산업은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어 앞으로도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기는커녕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규모 증대 추세를 억제하고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지속되는 상시 업무에 대해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강력한 정책적 개입이 절실함.

40. 일자리 확대를 이유로 파견업종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p>현행 파견법상 파견허용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임에 따라 용역·도급 등 일자리의 질이 더 낮은 영역에서 근로자가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파견규제는 가장 엄격한 수준이며, 고용률이 높은 국가는 파견규제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견업종을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할 필요성 높음</p> <p>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파견업종에 대한 규제는 완화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는 늘려주면서 고용상 차별개선 등을 통해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보호방안 강구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판단됨</p>
더불어민주당	찬성	파견은 사용자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고용형태임. 파견일자리의 확대는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의 확대로 기존 양질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임
국민의당	찬성	파견업종 확대는 결국 나쁜 일자리만 양산

정의당	찬성	파견업종은 일자리 확대와 무관하며 파견업체의 중간 착취만 합법화하는 비정상적인 고용관행임. 일자리 중개는 파견업체가 아니라 공공 직업소개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
-----	----	--

4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나, 동일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동일가치노동’의 개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개념 정립이 우선될 필요가 있으며, 현장의 업무가 다양해서 동일가치노동인지를 판단하기도 어려움 -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연공급 중심으로 되어 있어 직무급체계로의 전환이 우선되지 않는 경우 그 실효성에도 의문 따라서 동종·유사 업무 종사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개별 법령을 통한 보호가 오히려 차별 해소에 실질적이라고 판단됨
더불어민주당	찬성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별은 금지되어야 함. 특히, 기업단위 임금 등 결정이 이뤄지는 한국적 노사관계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원칙은 지켜져야 함
국민의당	기타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나 동일노동에 대한 정량화가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많음
정의당	찬성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확대는 중산층 붕괴, 사회 양극화 확대, 내수경제 약화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42. 파견·하청 노동자도 노사협의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파견·하청 근로자는 직접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서 노사협의회에 근로자 위원으로 참여케 하는 것은 해당사업장 노사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신 중할 필

		<p>요가 있음</p> <p>-다만 파견·하청 근로자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업무 연관성이 크고 원청의 결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일정한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는 있음</p>
더불어민주당	찬성	<p>파견·하청노동자의 경우 원청기업의 지배 관리 하에 놓여 있음에도 임금 등 각종 근로조건 등에 관한 근로자 참여가 배제되어 있음. 노사협의회 참여는 가장 최소한의 권리보장을 위한 것임</p>
국민의당	찬성	<p>비정규직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됨</p>
정의당	찬성	<p>파견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업체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큼 원청업체의 노사협의회에 참여하여 경영 및 작업정보 공유, 근로조건 개선, 고충처리 신청권을 부여해야 함. 파견업체나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와 노동자 사이에서 인력 중개 이외에 노동권을 개선시킬 역량과 재원을 갖추고 있지 못함.</p>

43. 임금피크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약하여 청년일자리 대책이 될 수 없으므로 무리하게 도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p>임금피크제는 장년고용안정과 더불어 청년 신규채용 확대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음</p> <p>※ 100인 이상 사업장 7,500여개 분석결과,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이 미도입 사업장 보다 청년층을 16% 더 많이 채용하고 장년고용은 안정</p> <p>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대표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 협력하고, 기업은 절감된 인건비를 투자하여 청년 채용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하였음</p>
더불어민주당	찬성	<p>청년과 장년(고령자) 일자리 대체효과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결과임. 특히, 임금피크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할 사안이지 사측이 일방적으로 도입하도록 현행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어기도록 정부가 지침으로 지도할 사안이 아님</p>
국민의당	찬성	
정의당	찬성	<p>임금피크제는 고령층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로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는 무관함. 고령층과 청년층의 일자리</p>

		가 중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노동부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나온 바 있음.
--	--	---

44. 최저임금 인상률의 하한선을 법으로 정해 생활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적정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최저임금은 물가, 노동생산성 등 국민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하한선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곤란
더불어민주당	찬성	최저임금은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공 교섭식의 임금결정은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만들 수 없음. 이에, 최저임금의 하한선(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하한선으로 법적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국민의당	찬성	최저임금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최소한 장치임
정의당	찬성	최저임금제도는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을 인상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저임금 개선을 위한 강행 법규로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생계비 인상률, 노동소득분배율 개선 등을 포함하여 하한선을 정해야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45.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며, 개인에 대한 압류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음. 노동분야의 특수성만 감안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할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민사법 원칙에 위배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	찬성	헌법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로 적시하고 있음. 최근 사용자들이 노동조합활동의 제약하기 위해 손해배상·가압류를 무분별하게 남용하여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바 있으나, 여전히 자행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함

국민의당	찬성	피해를 정량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정의당	찬성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개별 노동자들이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개별 사용자와 임금 및 노동조건을 계약하는데 불리하기 때문임. 노동3권이 없으면 기업은 노동자들을 무제한 착취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동자 보호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손해배상을 제기할 경우 노동3권 자체가 무력화되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극단적으로 취약해질 것임.

46.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은 허용되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지금 현재 초기업노조의 경우에는 판례 등에 의해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받고 있지만,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허용될 경우 노사관계 안정에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민주당	찬성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초기업 단위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국민의당	찬성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하는 인권보호 장치임
정의당	찬성	실업자를 노조가입에서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노동인권 후진국에서도 가능한 일임. 이미 우리나라 노조들의 다수는 산별노조로 전환한 상태이며 산별노조는 특정 산업의 모든 노동자 및 실업자를 조합원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음. 산별노조의 실업자의 취업알선 등 노조의 본연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노동악법에 불과함.

47. 정부가 시행한 일반해고, 즉 저성과자 해고제도는 쉬운 해고로서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정부가 마련한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새롭게 도입한 것이 아니라 법과 판례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여 해고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며, 해고를 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환경에 맞추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임
더불어민주당	찬성	업무 부진 및 부적응을 이유로 한 해고의 일반화는 사용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존하여 노동인권을 훼손하게 될 것임
국민의당	찬성	사용자와 근로자간 분쟁을 야기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에 도움도 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의해 악용될 소지가 많음
정의당	찬성	정부의 일반해고 지침은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성과기준에 따라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제도임.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계량적인 성과평가 지표를 모든 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며 공정성 문제제기 등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됨.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됨.

48.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2년을 연장하는 것은 찬성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2년 사용제한규정은 유지하되, 근로자가 신청 시 2년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연장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 연장기간 만료 시 무기계약으로 전환 의무 부여, 기간 만료 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이직수당 지급, 별도 조치 없이 계속 사용시 무기계약 간주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이는 현행법에 따른 일률적 기간제한(2년)이 일부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측면을 보완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더불어민주당	반대	비정규직은 예외적인 사유로만 허용되어야 함. 현행 2년의 기간제법 개정안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라는 취지임에도 이를 4년으로 연장시켜 지속적 기간제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국민의당	반대	사용기간제한에는 동의하나 4년은 기간제근로자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어 반대

		합
정의당	반대	전국민 비정규직법에 불과함. 2014년 8월 기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분석결과, 전체 노동자(1,877만6천명) 중 기간제는 207만6천명(11.1%)임. 35세 이상 기간제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으로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은 결국 모든 비정규직들의 희망을 4년 뒤로 미루게 하는 사(四)후대책이며, 정부가 장그래법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드라마 미생 주인공 장그래는 정부 대책 이후 다음 시즌에서도 미혼인 채로 파견직이나 사내하도급으로 등장할 수 밖에 없을 것임. 심지어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전환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임.

2. 정치분야

49. 대통령 임기를 5년(현행)에서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답변 곤란
더불어민주당	기타	계속 논의 필요
국민의당	기타	내부 논의된 바 없거나 결정된 사항이 없음.
정의당	기타	대통령 임기는 개헌사항임. 개헌은 87년 민주화 이후 논의만 무성했지만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음. 또한 대통령중임제나, 내각제나 등 권력구조의 개편은 국민적 동의와 공감의 필요한 개헌 사안임. 정의당은 찬성과 반대를 떠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논의를 진행할 것임.

50. 대선 결선투표제의 도입으로 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답변 곤란
더불어민주당	찬성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제를 시행하는 것은 선거의 세계적인 경향임
국민의당	찬성	소수정당에게도 정치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결선투표제 도입에 찬성함
정의당	찬성	모든 정치제도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선거제도 또

		한 어떤 한 선거제도가 제일 좋다고 이야기 할 수 없음. 특히 한국은 대통령제 국가인데,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 중에서 결선투표제를 채택하지 않는 나라가 예외일 정도로 일반화 되어있음. 이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선출하는 데 다수의 지지는 대통령에서는 더 큰 의미를 지니기 때문. 또한, 대선 결선투표제는 후보 단일화라는 ‘비공식적’ 제도가 가지는 불확실성과 선거공학적인 측면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임. 특히 대선 결선투표제는 유권자의 사표심리를 방지하여 소신 투표를 통한 참여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	--

51.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는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가 적합하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답변 곤란
더불어민주당	기타	계속 논의 필요
국민의당	기타	내부 논의된 바 없거나 결정된 사항이 없음.
정의당	기타	대통령제에서는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지위를 겸하는 대통령이 방대한 권력을 가지면서 임기중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대통령의 독재화와 무책임 정치의 발로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적극적인 국정수행과 책임정치의 실현, 독재방지 등 을 위해서는 내각제가 적합할 수 있음. 그러나 한 국가를 책임지고 이끄는 권력 구조의 정답은 없음. 다만, 효과적인 국가운영을 통해 일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보다 민주적인 국정 운영이 필수적임.

52. 여야가 절반씩 추천해 구성하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방식 및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찬성	향후 20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관련 특위에서 논의
더불어민주당	반대	사실상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이므로 구성방식을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임. 다만, 정당이 추천한 획정위원이라 하더라도 정당이 간섭하지 말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임

국민의당	기타	내부 논의된 바 없거나 결정된 사항이 없음.
정의당	찬성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있어 여야가 절반씩 추천해 구성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보는 것처럼 논란만 가중시켜 선거구획정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훼손하였음. 중립성과 합리성, 객관성을 담보한 선거구 획정은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이를 위해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에서 정치권의 추천을 배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단체 등 엄정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임.

53. 현행 300석의 국회의원 의석 중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더 늘려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과 관련하여 새누리당은 현행 300석을 유지 하고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더불어민주당	찬성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를 늘려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필요
국민의당	기타	내부 논의된 바 없거나 결정된 사항이 없음.
정의당	찬성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인 소선거구단순다수대표제로부터 발생하는 사표방지, 직능대표성 확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통해 국회의 정치 다양성과 사회적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을 강화하는 것임. 우리나라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임.

54. 국회의원 수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할 때 새누리당은 현행 300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더불어민주당	반대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민정서상 늘리기가 쉽지 않음
국민의당	반대	현재의 의원수를 늘리기 보다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임
정의당	찬성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1명당 인구수가 큰 편임. 이는 한국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며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권력을 분산하여 소수일수록 강화되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기득권을 제한 할 수 있음.

55. 정당 국고보조금을 독일처럼 당비 수입 규모에 비례해 차등지급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공식 논의된 바 없음
더불어민주당	기타	당비수입 규모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데 반대하지는 않으나, 의석 수나 득표율 등 다른 요소도 고려해서 통합 배분해야 할 것임
국민의당	기타	내부 논의된 바 없거나 결정된 사항이 없음.
정의당	찬성	교섭단체 중심의 현행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제도는 민주주의와 배치되는 기형적인 제도임. 지금까지 정당 국고 보조금의 배분은 거대양당, 기득권 중심으로 배분 되어왔음. 정의당은 정당의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수와 연동한 매칭펀드제 도입으로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을 제안함.

56. 한 선거구당 1위 후보 1명만 당선되는 현행 선거제도(소선거구-다수대표제)가 아닌 다른 선거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향후 20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관련 특위에서 논의 가능
더불어민주당	기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이고 비례를 늘려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할 것임
국민의당	찬성	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정의당	찬성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제도로 다량의 사표를 발생시켜 유권자의 민의를 국회 대표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 유권자의 표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함.

57. 일정직급 이하의 공무원과 평교사들의 정당 당원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제7조)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정신에 충실해야 할 것임. 특히,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초·중등교원은 감수성과 모방성, 수용성이 왕성한 학생들의 인격형성 및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정치활동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수 있음
더불어민주당	기타	<p>공무원이나 교사의 정당가입을 제한하는 국가는 거의 없음. 다만, 우리의 국민의식이 아직은 이들의 정당가입에 우호적이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일정직급 이하의 공무원이나 평교사 등에 대해 업무와 관련 없는 분야에서 개인적 정치활동을 허용하되, 정치활동 권유, 정치적 목적의 선전 등의 일부 정치활동은 계속 규제해야 할 것임.</p> <p>대한민국 헌법은 누구에게나 정치적 의사표현에 자유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공무원 또한 시민의 한 명으로서 정당가입, 후원금 납부 등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음. 공무원법상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의 일원으로써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르지 않고 공평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명시된 것임. 그러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의 제약은 업무상에서만 한정함이 마땅함.</p> <p>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고 있음. 유럽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특정한 법률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다른 시민들과 같이 헌법적 수준에서 정치참여가 보장되며, 미국의 경우 정당간부의 직위를 갖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정당가입, 후원금 납부 등의 제한은 없으며,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일본의 경우에도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은 허용하고 있으며 단지 정치활동 권유, 정치적 목적의 선전 등의 일부 정치활동은 규제하고 있음.</p>
국민의당	기타	내부 논의된 바 없거나 결정된 사항이 없음.
정의당	찬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근무기강을 확립

		하는 방안은 국가공무원법에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가입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됨. 또한,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함으로써 실현되는 공익은 매우 불확실하고 추상적인 반면 정당가입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공무원의 기본권에 대한 제약은 매우 크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정당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과 평교사의 정당 가입은 즉시 허용되어야 함.
--	--	---

58. 현재 금지되어있는 법인(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새누리당은 현행법을 존중하는 입장이며, 본 사안에 대해 공식 논의된바 없음. 향후 20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관련 특위에서 논의 가능
더불어민주당	기타	기업의 후원은 계속 금지하되, 노동조합 등 단체의 후원은 허용할 필요가 있음
국민의당	기타	내부 논의된 바 없거나 결정된 사항이 없음.
정의당	반대	현행 선거법에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과 기업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거래가 이루어져 정치 혼란과 대국민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 상황임. 이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게 된다면, 정경유착을 합법화하여 정치, 사회적 혼란만 키우게 될 것임. 따라서 법인(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을 엄격히 금지하고, 현행 소액 다수 정치자금 후원제도를 활성화 하여 정치자금 후원제도의 투명성 강화해야 할 것임.

59. 예산과 결산 심의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예결위원회를 상임위원회화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여야간 합의에 의해 현재 예결위원회는 상설화 되어 있음. 예결위 상임위화와 관련해서는 추후 20대 국회에서 여야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음
더불어민주당	찬성	국회 예산결산 심사의 투명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함

국민의당	찬성	정부의 예결산 과정이 연중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예결위도 상임위로 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부사업을 심도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함
정의당	찬성	매년 반복되고 있는 예산안 처리시한에 쫓긴 ‘졸속·부실심사’나 비공개 예산심사과정에서의 고질적인 ‘쪽지예산’ 등의 문제점은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규정 시행 이전이나 이후나 달라진 점이 없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예산심사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대통령제 국가에서의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의 재정통제 권한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 국회 예결위원회 상임위원회화는 필수적임.

60.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 수입·지출을 투명화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당 차원의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통해 출판기념회를 전면금지하는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	찬성	
국민의당	찬성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을 차단해야 함
정의당	찬성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는 대표적인 불법정치 자금의 유입 통로로 활용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있음.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한 관리를 강화하여 불법 정치자금 유통을 차단해야 함.

61. 정당의 공천이 상향식(당원 투표, 오픈프라이머리 등)으로 이루어지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당의 공천 관련 사항이므로 답변 자체가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기타	법으로 일률적으로 상향식 공천을 규정하기에는 정당마다 사정이 있어서 어려울 것이나, 현행과 같은 안심번호제도 등을 보완해 나간다면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임
국민의당	기타	내부 논의된 바 없거나 결정된 사항이 없음.
정의당	찬성	현재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에서 공직후보자 선출제도는 전략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음. 하지만 이는 사실상 밀실공천이나 계파공천 등으로 당원들의 의견 수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전략밀실공천, 보스공천을 정치제도에서 추방해야 할 것임. 따라서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참여로 상향식 공천을 제도화 해야 할 것임.
--	--	--

62. 현행 1년에 20일간만 운영하는 국정감사를 상임위별로 연중 운영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상임위 차원의 현안질의는 언제나 가능하고, 국회는 상시국회로 가는 추세임. 부실, 졸속국감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20대 국회에서 개선점을 추후 검토
더불어민주당	찬성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 강화
국민의당	기타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피감기관에 대한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의당	찬성	매년 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회기 중 20일간 모든 정부기관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안 검토시기와 중복되어 집중도가 떨어짐. 국정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정하는 과정에서 여야합의의 실패로 국정조사가 지연되거나 무산되고 있음. 또한 그 활동기간이 짧아 쟁점사항의 경우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함. 따라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상임위 중심으로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여 국회의 행정부 감시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함.

63. 국회가 연중 상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찬성	연중 상시국회로 가는 추세에 있음. 전략적인 국회 파행 등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공약사항인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추진 예정
더불어민주당	찬성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 강화
국민의당	기타	현재도 여야간 합의하면 연중 운영이 가능함.
정의당	찬성	19대 국회는 민생을 살려야 할 국회가 오히려 새누리당, 더민주 등 거대 양당에 의해 갈등과 분열만 조장하는 장으로 전락하여 국민들의 정치불신과 국회불신, 국회무용론을 확대하였음. 따라서 ‘일하는 국회’로 국회가 연중 상시 운영되어 대국민 정치 효능감이

		높아지도록 제도화 해야 할 것임.
--	--	--------------------

64.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로 당선이 무효화된 사람은 이후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당의 공천 방침과 관련한 사항이므로 정책위 차원의 답변이 곤란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당 차원에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등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할 것임
국민의당	찬성	정치가 깨끗해지도록 원칙을 지켜가야 함
정의당	찬성	당선이 무효화 된 사람 뿐 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를 행한 이력이 있는 정치인도 모두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이 마땅함. 공직후보자 검증 기준을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와 정당에도 마땅히 적용해야함. 특히, 국민들의 생활을 돌보기 위해 만들어진 입법부에서 일할 사람들은 그 어떤 공직보다 더 엄격하고 엄중한 검증이 필요함.

65.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거 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선거운동기간 인터넷 실명제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언론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등이 유포될 경우 광범위한 사실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는 존치하고 있음. 향후 20대 국회에서는 이에 대해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신중 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헌법재판소,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에 대해 합헌 결정, 2015.7.30)
더불어민주당	찬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
국민의당	기타	내부 논의된 바 없거나 결정된 사항이 없음.
정의당	찬성	인터넷실명제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이나 비방내용을 게시한 사람을 적발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도 되지 않음. 오히려 이를 빌미로 국정원, 경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정당화하여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함.

66.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찬성	공직자가 친·인척 등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대해 기피·회피 등의 방식을 통해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법안의 제정 취지에 전적으로 찬성함. 앞으로 공직자와 직무의 범위, 기피·회피 절차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더불어민주당	찬성	공직자들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해충돌방지제도 필요
국민의당	찬성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실효성을 고려해야함
정의당	찬성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덕목은 공사의 구분인데,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해관계가 생겨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함. 기본적으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그러한 상황에 처해서라도 공직자가 공정성을 잃거나 부패에 연루되지 않게 법적, 제도적, 문화적으로 예방하고, 견제 및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 임명직, 선출직 공직자 뿐만 아니라 손해사정인 등 감정평가 직종, 기술자, 경영진, 의과학자, 의사, 작가, 언론인 등도 포함될 필요가 있음.

67. 관피아 척결을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등 정부의 인사혁신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찬성	공직자윤리법 개정('15.3.31)에 따라 증가된 취업심사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취업이력공시제도 등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운영을 철저히 할 필요
더불어민주당	찬성	민관유착 등의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
국민의당	찬성	공직사회가 모범을 보이고 이해관계에 의한 사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임
정의당	찬성	관피아는 관료-이익집단/기업-정치인 등 철의 삼각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패의 전형적인 고리로써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대상. 일반직 공직자는 평생직장일 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에도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며

		재직 때와 준하는 공직자윤리를 지켜야 함. 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몸담았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요건 강화 등 취업심사 기준을 엄격히 하여 정부의 인사혁신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	--	--

68. 기초단위(시·군·구) 지방선거에는 후보를 정당이 공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정당공천제는 양면이 있음.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측화라는 폐해가 있는 반면 유능한 정치 신인의 발굴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음. 하지만 기초단체에 대한 정당공천제 하나만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계획(지방자치발전위원회)과 연계해서 충분한 국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검토할 사안이라고 판단함
더불어민주당	기타	정당이 지방선거에 공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다만,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당은 2014년 기초선거에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새누리당이 이에 응하지 않아서 무산된 바 있음. 앞으로도 모든 정당이 합의했을 경우 기초선거에 정당 공천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임
국민의당	기타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임
정의당	반대	정당공천이 당원중심으로 민주적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지는 등 순기능으로 작동할 때, 청렴하고 유능한 정치인이 탄생될 수 있음. 동시에 정당 공천은 능력 검증은 안된 반면, 재력이 많은 지역 토호세력이나 유지들이 기초의회나 기초자치단체를 장악하는 것을 방지함. 이러한 정당공천의 순기능을 외면한 채, 당장 중앙당의 지나친 관여와 공천비리 등의 문제만으로 기초단위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69. 총 조세 대비 20%대 수준의 지방세 비중을 4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

		이나 전체 사무 대비 자치사무의 비중에 대한 고려없이 지방세 비중을 4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는 적절치 않음. 자치사무의 비중이 32% 수준(2013년 기준)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즉 국가사무 중 현지성이 높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우선 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이양하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임. 20대 총선 공약 중 지방 일괄이양법 제정 공약은 그동안 이양 결정된 사무(633개 사무)를 일괄 이양하고 그에 따른 행·재정지원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사무의 이양에 대한 고려 없이 지방재정 비중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관계기관의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임.
더불어민주당	찬성	지방의 사회복지비용 등이 증가하고 있어서 지방재정 확대 필요
국민의당	기타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임
정의당	찬성	국세:지방세 8:2, 중앙재정:지방재정(교육포함) 4:6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세입과 세출의 지나친 괴리로 지방재정의 독립성과 책임성 문제를 야기함. 그에 따라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성이 강화되어, 단체장으로 하여금 정부부처나 유력정치인들을 찾아가 지역예산을 구걸하는 상황이 발생. 10중 4를 중앙정부가 이전하고 재원조정(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배분)과정에서 형님예산, 실세예산 등 중앙권력 강화, 지방자치 침해 현상이 발생함.

70. 자치경찰제는 광역 자치 단위로 설치되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최종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함. 다만, 현재 국가경찰 체제에서 자치경찰의 도입은 매우 획기적인 시도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을 참고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하는 것은 시행착오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봄
더불어민주당	기타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되, 먼저 방법 교통 등의 분야에서 기초단위로 실시하고 점차 확대여부를 검토할 필

		요가 있음
국민의당	찬성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지장자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됨
정의당	기타	자치경찰제 도입은 찬성하나 시군구 단위 설치가 바람직함. 지역별 인구구성 및 범죄발생 유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치안수요 또한 상이한 상황. 주민밀착형,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교통, 방범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이 담당하며 점차 권한을 확대해야 함. 또한 자치경찰위원회 설치와 민주적 구성을 통해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71.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해 자치단체장이 교육까지 관할하도록 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하지만 현재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로 인한 주민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 등의 문제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연계·협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해소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민주당	기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완전한 통합보다는 이들간의 연계성을 강화 확대할 방법이 필요할 것임
국민의당	기타	내부 논의된 바 없거나 결정된 사항이 없음.
정의당	반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은 최근 교육감 선거에서 우후죽순 보수진영 후보가 떨어지는 상황이 반복되자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것임. 교육감 직선제를 추진한 것도 새누리당으로,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중대한 선거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임.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지나친 중앙집권화 및 정치적 중립 훼손 방지, 지역별 교육수요가 담긴 다양한 교육정책 의제 등장 등 장점이 많으며, 지금은 폐지가 아니라 제도의 정착과 성숙을 위해 노력해야 함.

3. 사법분야

72. 국정원에 대해 국회의 예산감시 통제와 권력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국회는 여타 부처와 마찬가지로 국정원에 대해서도 사실상 상시 정보위 원회 가동과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매년 예산 및 결산내용을 제출 받아 엄격히 심사하는 등 편성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2014년 국정원 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국정원의 예산통제를 강화하고, 권한 남용 차단을 위한 견제장치도 강화하였음
더불어민주당	찬성	국정원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민주국가에서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의 강화 필요
국민의당	찬성	국정원에 대한 본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해야 함
정의당	찬성	정치개입, 사건조작 등 민주주의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너무 큼. 따라서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 수집, 분석 업무를 전담하는 명실상부한 정보기관으로 개혁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며, 이와 함께 국가기관의 권한남용과 비리 등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방안인 국회의 예산 및 업무감시와 감사권이 확대되어야 함

73. 노동법원 신설 등 법원 전문화가 필요하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노동법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노사간에 입장 차이가 커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위원회가 지닌 노동분쟁해 결의 신속성·경제성·접근의 용이성 등을 감안할 경우 노동법원 도입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임 -우선 현행 노동위원회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중립적·전문 적인 준사법적 기관으로 발전시키고, 사법시스템 내에서 노동위원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소송절차의 특례들이 보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노동법원 도입 여부 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	찬성	원칙적으로 찬성. 기존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의 검토 및 노동계와 학계 등 이해당사자와 관련 전문가 집단의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
국민의당	기타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법원의 전문화보다는 판사의 수

		를 늘려 사건처리를 신속히 하는 것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
정의당	찬성	노동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노동현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노동법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판결의 공정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필요함

74.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삼권분립 원칙에 의해 헌법기관인 사법부에서 면밀한 검토 후에 판단
더불어민주당	찬성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및 소수자와 약자의 대변 필요
국민의당	찬성	대법관 수뿐만 아니라 판사의 수도 늘려야 함
정의당	찬성	헌법이 정한 3심제를 준수하면서, 대법관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 수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임

75. 대법관 전관예우 금지 입법을 통해 대형 로펌 등 영리취업을 차단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 보장하기 위하여 전관예우 관행을 법률로써 제한 하여 사법절차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도입이 필요 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여론 수렴 및 법률적 검토를 통해 추진 필요
더불어민주당	찬성	전관예우 금지 및 회전문 인사의 차단
국민의당	찬성	일정 냉각기간을 갖도록 하여야 함
정의당	찬성	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 혹은 대형 로펌 취업으로 인한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함께 대법관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고려할 때, 영리 목적의 취업에 대한 제한이 필요함. 이를 통해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 현상 등 법조비리를 줄일 수 있을 것임

76. 독립적인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구를 통한 특검을 도입해야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현행 상설특검법은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

		고, 법안 내용을 심층 검토하여 ‘기구특검’이 아닌 ‘제도특검’을 도입하는 것으로 여야간 합의를 거쳐 2014년 2월에 제정되었음. 아직, 현행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가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제도 시행 후, 시행성과를 분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그 이후, 기구 특검 등을 포함하여 현행 특검법의 보완여부 및 그 방법 등을 논의하는 것이 상당함
더불어민주당	찬성	사안별 특검 임명,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미흡, 수사팀의 지나친 검찰 의존 등 제도특검의 한계 극복을 위한 기구특검 도입 필요.
국민의당	기타	상시 특검제는 검찰제도의 근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정의당	찬성	현재 도입된 특별검사제도는 특별검사 임명절차로부터 시작하여, 권한 및 수사대상 등에 있어서 사법정의 실현에 있어 한계가 분명함. 따라서 독립적인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구특검제를 도입하고, 이와 함께 임명절차 개선(국회 1인 선출 후 대통령 임명), 수사대상의 확대 등의 개혁이 필요함

77. 권력형 부패 척결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옥상옥으로 기관을 중복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임. 특별감찰관(대통령 친·인척 및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대상 감찰), 국민권익위원회(부패 혐의 신고 접수 및 조사 고발 등), 검찰청 등 다수기관에서 관련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행 수행체계에 대응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함
더불어민주당	찬성	권력층과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에 대한 검찰의 눈치보기수사, 봐주기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의 시정을 위한 제도도입 필요
국민의당	찬성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청렴이 매우 중요함
정의당	찬성	검찰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소독점주의 및 편익주의, 검찰동일체 원칙에 따른 검찰의 권력화 현상 및 정치·경제 등 사회 각 분야 권력과의 검찰의 유착과 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

		는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가 필요함
--	--	-------------------------------------

78.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법무부에서 ‘사법시험 폐지 2021년까지 4년 유예’를 발표한 바 있으며, 로스쿨 제도의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후 결론
더불어민주당	기타	법조일원화, 로스쿨제도의 도입 취지와 학계 및 이해 당사자의 여론을 수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국민의당	기타	내부 논의된 바 없거나 결정된 사항이 없음.
정의당	반대	법조계의 배타적 독점으로 인한 권력화, 인적 및 재 정적 측면에서 소모적인 현상과 함께 사법시험 낙오 생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이 있음

79.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독점하는 현행 수사구조에서 나타나는 이중수사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함.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 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견제와 균형, 책임과 권한의 일치라 는 원칙이 실 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 임. “검·경의 합리적 역할 정립” 이 행을 통한 글로 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국가 수사시스템 구축은 정 부의 국정과제임
더불어민주당	찬성	검경수사권조정을 통한 검찰권한의 집중에 따른 폐해 시정 및 견제와 균형을 통한 민주적 통제확보. 검찰 에게 집중된 수사권을 1차적으로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국민 편 의를 도모하고자 함
국민의당	찬성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 의와 검토가 필요함
정의당	찬성	모든 사건이 아니라, 경미한 사건의 경우 사실상 경 찰의 수사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지휘는 자칫 검찰에 의 한 경찰 통제 내지 하급기관화 경향을 유발할 수 있

		고, 경찰의 수사능력 향상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 보장이 필요함
--	--	--

80. 각급 법원장급 인사는 독립적인 법관회의를 통해 의결되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삼권분립 원칙에 의해 헌법기관인 사법부에서 면밀한 검토 후에 판단
더불어민주당	찬성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법관 인사제도의 분권화를 통해 사법부 관료화의 폐단 시정
국민의당	기타	현행 사법제도와 지방분권적 형태를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제도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정의당	찬성	법원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에게 독점되어 있는 인사권을 고등법원급으로 분산시키고, 간부뿐만 아니라 평판사들도 참여하는 독립적인 법관회의(인사위원회)에서 공정성, 합리성, 객관성이 보장되는 평가방식을 통한 인사제도 도입이 시급함

81. 최소한의 검찰 업무를 제외한 법무부 모든 부서의 구성원은 검사가 아닌 자로 충원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법무부 업무 특성상 정부의 법률전문가인 검사들의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의 활용이 필요한 분야가 대부분이며, 주요 국정과제 수행 등 신규업무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적정 규모의 검사 근무 불가피, 또한 검사들 정도의 경험, 학식,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전문가(변호사 포함) 충원은 현재 공무원 보수체계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도 감안 필요
더불어민주당	찬성	법무부와 검찰의 인적 구성의 동질화로 인한 폐해시정을 위한 법무부 문민화 필요
국민의당	기타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인원 충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정의당	기타	검찰의 독립성을 위하여 법무부와 검찰의 조직 분리가 필요함. 현행과 같이 검사의 인사 및 업무수행 등에 법무부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사의 법무부 직원 임용

		제한만으로 검찰의 독립성은 확보되기 어려움.
--	--	--------------------------

4. 통일분야

82.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북한과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p>개성공단의 전면 중단(2.10)은 북한의 핵실험(1.6), 미사일 발사(2.7) 등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단행한 대북제재 조치임. 또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공조하여 유엔, 미·중·일 등 국제사회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양자 및 다자 차원의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있음.</p> <p>그러나,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2.11), 기존 경험무효화(3.10), 지속적인 군사도발 등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우선적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대북제재를 실시하여 북한의 비핵화와 올바른 변화를 촉진할 것임.</p> <p>향후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협상이 가능할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는 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봄</p>
더불어민주당	찬성	개성공단은 재가동해야 함.
국민의당	찬성	평화를 통한 한반도 안정을 위해 개성공단이 정상화되어야 함
정의당	찬성	<p>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명분도 합당치 않고 효과도 없는 자해적 조치입니다. 홍용표 통일부장관과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현금이 노동당 서기실, 39호실 등에 들어가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북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동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입증할 증거 여부에 대한 홍 장관 발언의 잇단 반복, “물표로 지급되는 임금의 70%는 대부분 북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를 통해 북 노동자가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무역업자에게 간다.”는 증언에 비추어 보아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설사 정부의 말을 전적으로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한 해 개성공단을 통해 북으</p>

		<p>로 들어가는 현금 약 1억달러는 장거리로켓 1회 발사 비용의 1/10에도 못 미쳐 그것 때문에 북의 핵-미사일 개발이 이뤄졌거나, 동 조치로 인해 핵-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p> <p>개성공단 사업은 우리에게 첫째, 중소기업의 활로 개척 및 남북 상생의 경험이라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둘째, 북한 주민의 대남 적대감 완화와 남북 주민 간 이해 증진, 동질성 회복 및 북한의 시장경제 훈련 등 통일 준비, 셋째, 전진 배치되어 있던 개성 일대 휴전선 부근 북한군의 후방 철수 등 군사적 이익과 긴장 격화 방지 등의 안보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5.24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동 공단이 유지됨으로써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 및 분쟁의 확산으로의 비화 방지를 막을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역할을 해 왔습니다.</p> <p>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이어 북측의 강경 맞대응으로 남북관계는 경험의 타격은 물론 군사적으로도 큰 완충 지대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남북관계에 대한 일체의 지렛대가 사라져 큰 위기와 손해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기업의 기업주들과 노동자들의 피해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벌써 입주기업 종사자 약 2000명이 해고통지를 받았고, 협력기업 종사자를 합치면 5000명이 곧 실업자 신세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통과시 러시아, 중국 등이 자국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전략적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과도 비교됩니다.</p> <p>곧 장마철이 오면 전기공급도 끊긴 개성공단의 자재와 설비는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재가동을 위해 남북당국은 즉시 대화를 해야 합니다.</p>
--	--	--

83. 천안함 사건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대북 인적, 물적 지원 및 교류를 중단한 '5.24 조치'는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따른 응당

		한 조치로, 5.24 조치의 해제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함. 또한 현재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UN안보리결의안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및 우리측 독자 제재 등이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5.24조치는 더욱 철저히 이행 해야 함
더불어민주당	찬성	남북관계 정상화, 우리경제 발전, 실질적인 통일준비 차원 등
국민의당	기타	대립적 남북관계는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북한의 미사일 실험 이후 대북관계 재정립이 필요함
정의당	찬성	5.24조치 역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와 마찬가지로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하지 않은, '통치행위'라는 미명의 정부의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이 조치로 북한 내륙지역과의 교류협력사업은 전면 중단되었고, 개성공단도 신규 사업 투자는 제한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직접 피해만 해도 북한보다 남한이 3.9배에 달한다는 전문가의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이나, 대북 인도적 지원이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1988년 7.7 선언 이래의 화해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일, 접근을 통한 변화의 원칙에 위배되는 5.24조치는 즉시 해제되어야 합니다.

84.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우리 관광객 신변안전문제로 중단된 바,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 신변안전문제부터 협의·해결해갈 필요가 있음
더불어민주당	찬성	
국민의당	기타	남북간의 교류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정의당	찬성	강산관광은 남북 화해협력정책의 상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박왕자씨 피격 사건은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과 조치를 전제로 재개해야 합니다.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이 생전에 이런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이런 약속을 확실

		<p>히 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지만, 북한 체재의 특성 상 최고지도자의 발언 이상의 확실한 약속은 없습니다. 결국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깔려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8.25합의 후 진행된 남북 당국회담에서 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강력히 요구한 데 반해, 우리측은 끝내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측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금강산관광이 끊기고 난 다음에도 북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효성도 없는 현금 유입 차단 의 미망에서 벗어나, ‘화해협력정책을 되살리자, 신뢰를 되살리자’는 상징적 조치로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야 합니다.</p>
--	--	--

85.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찬성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종말단계 하층방어 수준임. 현재 우리정부가 탄도탄 방어능력 향상을 위해 M-SAM 및 L-SAM을 연구개발 중에 있으나, 2020년대 중반이 되어야 실전배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미국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현실화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전력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임
더불어민주당	기타	동북아 정세, 중국과의 무역문제, 기술적 유용성, 천문학적인 유지비 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
국민의당	반대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과 전술적 측면에서 효용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됨
정의당	기타	정부여당은 마치 사드를 지금 당장 배치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는다. 그러나 사드(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ce)는 그 배치를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사드는 말 그대로 적의 핵미사일을 종말단계의 40~150km 고고도에서 막기 위한 미사일방어망의 장치 일체로서 탐지거리 2000km의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를 포함합니다. 그런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될 때 북핵으로부터 우리의 안보를 더 튼튼하게 할지, 아니면 북핵 문제 해결에 더 난관을 초래할지

		<p>냉정히 따져볼 일입니다.</p> <p>만약 북한이 핵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굳이 노동 등 중거리 미사일을 고각을 높여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로 공격해도 충분합니다. 사드는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로부터 일본 방어, 중국 중거리미사일로부터 주한미군 기지 방어용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X-밴드레이더로 한반도 인근 자신의 주요 기지 활동이 감시.억제된다는 점과 함께, 주한미군의 양안사태 개입에 대한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데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지적된 전자의 문제는 러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p> <p>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러시아의 반발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안보현안인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러시아 대 미국-일본-한국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 한국으로서는 최악이고 북한으로서는 잃을 게 없는 대륙세력 대 해양세력의 안보차원의 대결체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1의 무역관계인 중국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은 경제적 안정을 해쳐 국민안전, 포괄안보를 해치게 될 것입니다.</p> <p>전략적 무기체계인 사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전략적 판단 속에 양국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종합적 안보에 대한 고려를 바탕에 두고 선뜻 나서지 않아야 합니다.</p>
--	--	---

86. 북핵문제 해결없이 남북한 경제협력은 있을 수 없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p>정부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정책기조를 유지,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하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응징하고,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음</p> <p>-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포함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과, - 드레스덴 구상과 민생·문화·환경의 3대 통로 개설, 민간교류활성화는 모두 이러한</p>

		대북정책의 목표와 원칙에 부합되는 조치임. 대화, 교류, 제재 모두 평화통일을 위한 도구이며, 지금은 제재를 통해 북한 변화를 이끌어 내야 제대로 된 평화를 만들 수 있음
더불어민주당	반대	북핵문제와 북한문제의 분리 필요. 선택폐기로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어려움.
국민의당	찬성	북한의 핵보유는 남북협력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정의당	반대	남북한 경제협력은 그 자체로 ① 잠재성장률 1% 이상 증가 및 남북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본격화되면 5% 정도의 성장 가능, ② 북한경제 역시 발전해 일방적인 흡수통일로 인한 경제적 격차와 그에 따른 부작용 예방, ③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주변국과의 평화 환경 조성에 기여해 국방예산 절감, ④ 남북 정권, 인민들의 상호 적대감 해소와 이해 증진 등의 의의가 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 없이 경험도 없다는 경직된 자세로 접근하면 이런 경험의 의의와 효과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북핵문제는 그 발생 원인, 지금까지의 경과과정으로 보아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므로 경험은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87.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근본적으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은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평화를 실질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봄. 상호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해서 평화가 바로 보장되는 것은 아님
더불어민주당	찬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국민의당	찬성	평화협정 체결이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지만 북미간 협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정의당	찬성	한반도는 여전히 정전체제입니다. 전쟁을 일시 중지한다는 정전협정을 대체해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화협정이 단지 종이쪽지에 불과하다면, 평화체제를 담보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보

		<p>수적 인사들은 오히려 미군철수 등을 유발해 안보불안을 낳을 것이라며 부정적입니다.</p> <p>그러나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정전체제를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전쟁의 불안에 구속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구조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런 상징적 행위이자, 결과물이 평화협정일 수 있습니다.</p> <p>더군다나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가장 핵심적 안보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평화협정 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선 비핵화 대 선 평화협정의 평행선만 달리지 말고,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비핵화-평화협정 체결 등 평화체제로의 전환-북미수교-북에 대한 에너지 지원과 경험이라는 포괄적 해법은 9.19공동성명의 근간입니다. 대화의 재개, 합의에 입각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에 대한 정부 당국의 열린 자세와 적극적 정책을 촉구합니다.</p>
--	--	---

88.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p>정부는 6.15 공동선언 및 10.4 선언 뿐 아니라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등 기존 남북간 합의를 존중하며 원칙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임</p> <p>남북이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상호 신뢰가 쌓일 수 있다는 점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바임.</p> <p>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모든 합의를 이행할 수는 없을 것임.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며, 사안의 시급성·재정문제·기술적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세부 이행 문제를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과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야 할 사항 등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할 수 있는 것부터 내실있게 이행해 나가야 할 것임</p>
더불어민주당	찬성	남북 정상 합의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 필요
국민의당	찬성	두 개의 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교류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선언이지만 그 실행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점이 매우 유감스러움

정의당	찬성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남북의 최고지도자가 만나 협의한 결과물이자, 내외에 천명한 약속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것을 부정하고, 박근혜 정부가 원칙적으로는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소극적이다 보니 남북 간에 신뢰가 사라지고 대결이 강화됩니다. 물론 10.4 선언에서 천명한 약속 중에는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해 참가한다는 등의 2007년 당시 상황에 입각한 구체적 약속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의 전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과 항구적 평화체제로의 전환, 경험 등 교류협력 사업의 발전 등의 정신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고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	----	---

89. 한미 동맹보다 한중, 한일, 한러동맹 등 균형외교를 통한 다자안보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한미동맹은 현재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넘어 글로벌 문제 까지 협력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면서 우리 외교의 근간이 되고 있음.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한미동맹 뿐 아니라 중·일·러 등 주변국과 전략적 협력 및 우호적인 관계 진전 역시 중요 하며, 한미동맹과 주변국과의 양자관계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임
더불어민주당	찬성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주변국들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한 균형외교 필요
국민의당	기타	외교안보적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매우중요하지만 한중 및 한러관계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임
정의당	찬성	북의 핵 능력 증강,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북의 반발이 맞부딪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에만 매달리다 보면 미국의 대중 견제를 위한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 요구 등 동맹의 성격변화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견제가 부딪치는 국제현실에 비추어 우리의 종합적인 안보는 더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강대국들이 지정학적 대립에서 벗어나 지정학적 이익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도록 균형외교, 조화외교를 전개해야 합니다. 더불어 북핵을 포함한 안보 차원의 대화와 협력을 한미중, 한미일, 한중일, 한중러 등 다각화시키고, 동아시아 차원 전통적·비전통적 다자안보협력 진전을 통해 평화공동체의 토대를 형성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럽에서는 헬싱키체제를 통해 냉전의 위기를 완화시키고 탈냉전 후 평화를 구조화했습니다. 동아시아판 헬싱키체제는 더 이상 구상으로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도래할 수 있는 신냉전체제의 예방을 위해서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	--	--

90.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정세와 상관없이 계속 지원되어야 하며, 이산가족 상봉은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찬성	북한의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임. 다만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규모 등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임 또한 정부는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전면적·근본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 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임
더불어민주당	찬성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인도주의와 동포애 발휘를 통해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될 것임.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실향민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국민의당	찬성	인도적 차원의 교류는 필요함
정의당	찬성	인도적 지원은 체제와 국적, 인종을 불문하고 인류애라는 보편적 정신에 입각해 실시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랫동안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왔고,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인데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정치군사적 상황에 긴박되어 인도적 지원

		<p>을 갑자기 줄이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비판과 조소의 대상이 됩니다.</p> <p>그리고 이산가족의 경우 대부분이 고령자로서 지난 15년간 하루 12명씩 사망하였는데,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즉시 상봉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20차례 성사되어 약 1만 9천여 명이 가족을 만났으며, 이는 전체 이산가족 상봉 대기자 12만 9천698명 중 15%에 불과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두 차례, 박근혜 정부 시절 두 차례에 비해 참여정부 시절에는 10회에 걸쳐 총 10,002명의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를 적용해도 여전히 남아있는 한 차례도 가족을 보지 못한 6만 3000여명의 사람들이 모두 상봉하려면 60여 차례의 상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상봉의 정례화, 나아가 상설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행정적 경비 등의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과 그 정례화 등에 소극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북한을 설득해 이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강산관광 재개 등과 맞바꾸는 유연하고 현실적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p>
--	--	---

91.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보장하는 대체 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남북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소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보장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제도의 악용이나 국론분열 등의 소지가 있어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음. 국방환경의 변화나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봄
더불어민주당	찬성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보장
국민의당	기타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를 통해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대체복무로 인정하는 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했음
정의당	찬성	병역이라는 공동체를 위한 임무가 개인의 양심과 충돌하지 않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이고 성숙한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정전체제이고 군인들, 특히 사병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상당수의 국민들은 불안과 불만을 느끼면서도

		<p>병역은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는 데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수 정부는 이것을 핑계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p> <p>그러나 OECD 국가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속, 수감시키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며, 국제인권기구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3년 기준으로 전세계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은 723명인데, 이 가운데 한국인이 669명으로 92.5%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예비군훈련 거부자도 80여명이 있는데 대체복무 없이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규정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음으로 인해 성숙한 민주국가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는 부끄러운 상황을 조속히 타개해야 할 것입니다.</p>
--	--	---

92. 한·일간에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폐기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금번 합의는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장관이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인 만큼, 재협상은 고려할 수 없다고 봄. 앞으로 재단 설립 등 합의 후속조치 이행 과정에서 피해자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봄
더불어민주당	찬성	위안부 할머니 당사자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한일 협상 폐기 및 재협상필요
국민의당	찬성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협상은 폐기되어야 함
정의당	찬성	정의당은 12.28합의의 무효 선언 및 재협의 추진을 주장합니다. 이미 정부 간에 합의한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 정부가 공식적으로 서명·교환한 각서나 서한이 없음을 외교부 스스로 밝혔으며, 협정으로서 국회에서 비준받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양측 정부 간의 구두 합의일 따름입니다. 설사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협정이 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반대와 개정 혹은 폐기 요구가

		<p>거셀 경우, 그런 의견을 반영해 정부가 다시 외교적 재협약에 나서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외교라고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는 그런 선언과 약속은 국제인권법에 반하고 있기 때문에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p> <p>유엔에서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일 정부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선언을 정면 비판하는 최종 견해를 내놓았고, 자이드 후세인 인권최고대표가 궁극적으로 피해 여성들만이 진정한 보상을 받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세인 인권대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 생존 여성”이라고 규정해, 12.28 합의 후에도 유엔 등을 무대로 위안부 문제가 전쟁범죄이자 국가범죄임을 부정하는 일본의 움직임에 쐈기를 박았습니다.</p> <p>정부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합의를 하지 못하는데 대해 사과를 하고, 그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단행하는 한편, 일본 아베 정부와의 재협약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한일 간의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청산만이 아니라, 여성 등 약자에 대한 전쟁범죄의 예방과 근절이라는 인류 보편의 인권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p>
--	--	--

93. ODA(정부개발원조) 중점협력대상국 명단, 선정 기준과 그 사유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중점협력국 명단 및 선정기준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다만, 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평가내용 및 사유들은 수원국에 대한 외교적 문제 소지가 있어 비공개
더불어민주당	찬성	ODA 중점관리대상국 명단과 선정과정공개로 ODA사업의 투명성확보와 국민적 공감대 확보 필요
국민의당	찬성	외교상 또는 전략적 측면이 있더라도 일정부분 공개되는 것이 국민들의 알권리 강화차원에서 바람직함
정의당	찬성	한국의 ODA 정책은 자원개발이나 기업의 해외진출 등에 활용하는 경제적 이익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원국의 복지증진과 경제발전을 통한 원조효과성 증진’이라는 국제규범에 크게 못 미치며, 원조 선

		<p>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협력 대상국의 빈곤퇴치와 인권증진을 비전으로 삼는 것과도 대조됩니다.</p> <p>이권 중심 ODA 근절, 원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정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p> <p>나아가 비구속성 원조의 명문화, 환경과 인권 신장을 위한 ODA 확대, UN 권고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ODA 예산의 확대 등 국제사회 중견국이라는 자부에 걸맞는 전향적인 정책을 전개해야 합니다.</p>
--	--	---

5. 사회복지/교육분야

94.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폐지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p>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갖추고, 통일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 개발을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교육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길러주고 현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안목과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훈과 지혜를 주어야함 - 특히, 남북 분단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 헌법 가치에 맞는 역사를 가르쳐야 통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가치관 혼란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그러나, 역사 교과서 검정제 전환('02년~) 이후 교과서에 대한 사실 오류 및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미래 세대의 역사교육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음 <p>* '02년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04 / '08년 금성 교과서, '11년 역사교육과정(자유민주주의) 논란, '13년 교학사 교과서 논란 등</p>
더불어민주당	찬성	<p>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정신 위배, 민주주의적 다원성에도 배치, 교육의 질 저하시킬 것임,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및 검정제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p>

국민의당	찬성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역사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제한하고 특정세력에 의해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이 왜곡될 위험성이 있음
정의당	찬성	역사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친일독재를 미화할 가능성 있습니다.

95. 학원 운영시간 제한을 의무화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우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법률 개정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입장 - 학원 운영에 대한 과도한 규제,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 침해 등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의 반대 의견과 개인과외교습 증가 등 사교육 시장의 풍선 효과 논란 등에 대해 종합적 고려 필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없음	검토중
국민의당	찬성	사교육을 축소하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른 시간이나 오후 10시 이후에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봄
정의당	기타	지금도 시도조례로 학원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96. 대학별 본고사를 허용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대학과 대교협이 자율적으로 본고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교교육 정상화 등을 고려할 때 실시 필요성이 낮음 2.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원칙 ○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 선발을 위해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음 - 건학이념, 모집단위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대학에 많이 부여되어 있어 본고사의 필요성이 낮으며, 오히려 ‘입시 간소화’ 정책에는 역행 - 학생부 중심 전형체제 정착으로 3불 관련 논란이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논쟁을 하는 것은 소모적이며, 자칫 대학과 정부의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더불어민주당	반대	대학별 본고사는 학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워 사교육 유발
국민의당	기타	대학별 본고사는 가능하다면 단순화가 필요함. 현재의 복잡한 본고사는 효과도 없을뿐더러 부작용만 초래하게 됨. NCS에 기반한 능력평가나 창의력, 상상력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제한된 종합논술고사는 필요함.
정의당	반대	입시와 사교육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인재 육성도 어렵습니다.

97. 대학재정 확충을 위해 기여입학제 도입이 필요하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p>대학과 대학교협이 자율적으로 기여입학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작용 및 법령 위반 우려가 큼</p> <p>2.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 선발을 위해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음 - (부작용) 현재와 같은 치열한 대입 경쟁 하에서는 계층간 위화감 조성, 대학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등 효과보다 더 큰 심각한 부작용 초래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대학이 아닌 상위 극히 일부 대학만 혜택이 있음 ※ 외국에도 금전 기부를 대가로 한 기여입학제를 정부 제도로 시행하는 사례는 없음 - (헌법 등 법령위배) 「헌법」의 교육기회균등 조항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차별금지 조항 위배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제31조 ②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 교육기본법 제4조의 “... 경제적 지위....를 이유로 교육 차별 금지”
더불어민주당	반대	형평성 위배, 계층간 위화감 유발

국민의당	반대	대학재정은 기본적으로 재단이 충당해야 함. 재단이 해야 할 일을 특정학생의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함. 더구나 부모의 영향으로 특혜입학하는 것은 교육적 위화감을 심화시킴.
정의당	반대	교육기회의 균등과 헌법에 어긋나고,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듭니다.

98. 특수목적을 상실한 특목고,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고교체제 개편은 학교,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이 존재하므로, 대국민 공청회, 의견수렴 등을 통한 국가적 합의 후 추진 가능함
더불어민주당	찬성	금수저와 흙수저 학교로 구분되는 고교 서열화 전면 수정 필요
국민의당	기타	미래사회는 학력 중심사회가 아닌 능력 중심사회가 되어야 함. 이를 위해 학생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고양하는 특목고는 바람직함. 다만 입시중심의 특목고는 축소하거나 전환할 필요가 있음. 그 전환은 일반고가 아닌 취업 중심 전문계고로 해야 함. 나아가 일반고도 축소하고 전문계를 확충, 임금이나 신분에서 차별 없는 다양성의 사회로 나아가야 함.
정의당	찬성	설립목적에서 벗어나면 특목고·자사고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고교 서열 완화와 고입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됩니다.

99. 중학교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국제중학교 등을 늘려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살리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 적이나, 중학교 교육과정의 의무교육 과정인 점과 국제중을 늘렸을 경우 중 학교 입시 과열, 사교육비 증대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	반대	학교 서열화 초래, 사교육 유발, 초등학교 비정상화 초래
국민의당	기타	현재의 영훈중 같은 국제중은 일종의 특권층 중심의 귀족학교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함. 다만 진로가 조기에 결정된 학생들을 위한 특수중학교는 확대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예술중, 체육중, 과학중처럼 조기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확충할 필요가 있음. 이를 창의융합형 미래교육과 연계시켜야 함.
정의당	반대	의무교육 단계의 불평등은 교육기회의 균등과 헌법에 어긋나며,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니다.

100. 대입 선발에서 지역균형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교육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학의 자율적 노 력을 유도하고 있으며, ‘지역인재 특별전형*’ 등을 이미 운영 중에 있음. - 다만, 특정 지역 및 계층의 선발 비율을 강제 할 당하는 것은 역차별 우려 및 대학의 자율성 침해 소 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 약학대에서 지역 고교 졸업생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
더불어민주당	찬성	흙수저 대물림 막고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위 해 정원내 대학 기회·지역균형선발전형 비율 확대 필 요
국민의당	찬성	미래사회는 자치와 분권형 도시국가임. 이를 위해서 는 획일화된 교육이 아니라 지역별 안배를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지역균형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지역출신 학생들이 서로 다른 가치와 문화를 공유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임.
정의당	찬성	수저계급론 등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 하기 위해서는 교육기회의 균등 조치가 많아져야 합 니다.

101. 대학입시는 대학의 자율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대학입시는 법령상 이미 대학의 자율 사항임 - 대학 이 건학이념, 인재상, 모집단위 특성을 반영해 자율

		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대학의 선발권 행사가 고교교육을 왜곡시키거나 과도한 수험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대학이 책무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민주당	반대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는 고교 입시 파행과 사교육유발 초래
국민의당	기타	기본적으로 대학입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교육적 가치를 상실하고 오히려 사교육을 부채질하고 공교육을 파행화시킬 우려가 큼. 이에 따라 적정 수준의 지침이 필요함.
정의당	반대	입시와 사교육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대학서열화가 심해집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미래인재 육성도 어려워집니다.

102. 사립대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찬성	우리나라 사립대학 등록금 수준은 OECD('14년 기준) 국가 중 두 번째이며 학생·학부모가 체감하는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음. 다만,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인하 한다면 대학의 재정여건 악화로 양질의 대학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경쟁력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
더불어민주당	찬성	더불어 민주당 공약 : 고등교육재정 확대 통한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 필요, 대학등록금에 대해 저소득층 대상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및 환급, 장기적으로 소득비례로 수업료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 도입 검토
국민의당	찬성	현재의 사립대의 등록금은 너무 높은 편임. 이를 반값수준으로 낮춰야 함. 사립대의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재단전입금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기부를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음. 높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생들이 학업을 소홀히 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임.
정의당	찬성	교육받는데 많은 돈이 필요한 사회는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수저계급론을 해소하려면 교육기회의 균등부터 해야 합니다. 교육기회의 균등은 경제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103. 정부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찬성	현재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무상교육이며,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현재 고교 진학률이 99.7%로 이미 고교 교육이 보편화되어 있고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 기회 보장 차원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음. 다만, 세수 감소 등 현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국가 재정 상황에 따라 도서벽지 등 교육소외지역부터 시작하여 향후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더불어민주당	찬성	유아부터 고교까지 실질적 무상의무교육 실현 필요
국민의당	찬성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책임제로 실시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함. 현재 박근혜정부도 공약으로 이를 약속했으나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임.
정의당	찬성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국가는 OECD에서 우리뿐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현재 의무교육으로 무상입니다.

104. 영유아 보육료 상한선을 폐지하여 보육료를 자율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영유아가구의 보육부담경감을 위하여 실시한 0~5세 전계층 무상보육의 취지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영리 목적의 운영보다는 공공적 목적을 위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해 보육료 상한 유지 필요
더불어민주당	반대	보육의 시장화 및 학부모 부담 가중 초래
국민의당	반대	우리나라의 차별적 교육은 영유아부터 시작됨.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발선의 기회균등의 교육이 필요함. 만약에 보육료 상한선을 폐지하게 되면 또 다른 특권층 영유아기관이 생겨 사회적 위화감을 조장할 것임. 부모의 빈부가 어린이의 차별이 되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음.
정의당	반대	보육은 모든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서비스로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별받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육료 상한선을 폐지하고 자율에 맡기게 된다면 영

		유아 때부터 보육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이후 발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질 높은 보육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해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 모든 어린이들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갖게 해 주어야 합니다.
--	--	--

105. 현재 최고 20만원인 0~2세 양육비를 인상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나, 양육 수당 인상, 양육 기술 등 부모교육지원, 시간제보육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등 다양한 방식 중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을 고려해야함
더불어민주당	찬성	그동안 인상되지 않은 가정양육수당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해야 함.
국민의당	찬성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육비를 인상하여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 경제문제로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정의당	찬성	0~2세는 시설보육보다는 가정보육이 선호되는 연령으로 가정 내 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현실에 맞게 지원액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106.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 예산을 2배(OECD 평균 수준) 늘려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최근 10년간 복지지출 증가 속도(연평균 증가율 12.65)가 OECD 평균 (6%)에 비해 매우 빠르다는 점, 연금 등 복지제도 성숙 및 고령화에 따라 '40년 경에는 OECD 평균(21.4%)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더불어민주당	찬성	저출산, 빈곤 등 심각한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 복지확충 불가피
국민의당	찬성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매우 취약함. 더구나 향후 저성장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매우 심각할 것임. 이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이 절대적임. 실업수당 확대, 청년취업수당 지급, 경력단절여성 교육, 취약계층 생계대책 등

		을 위한 재원이 대폭 확충되어야 함.
정의당	찬성	정의당은 사회복지예산을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 하자는 공약을 이번 총선에서 이미 제시했고, 복지임금 100만원 실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증세 50조원 방안도 제시해 책임있는 복지정치세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107.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부동산투자를 줄이고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보육, 노인장기요양시설)투자를 늘려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국민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것이 원칙
더불어민주당	찬성	기금의 장기 안정적 투자수익, 양질의 저렴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필요
국민의당	기타	국민연금은 모두의 미래가 달린 일임. 현재 국민연금의 운용이 다소 수익을 내고 있으나 이마저도 충분한 상황이 아님. 그러나 국민연금의 공익성 확대를 위한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공공인프라투자는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정의당	찬성	연기금 적립금 규모가 2015년 말 512.3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위험요인이 높은 주식, 부동산투자를 줄이고 사회서비스공공인프라를 늘리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국내채권 투자 수익률만큼 국가가 이자를 내고 빌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미래세대, 현재세대, 노인세대 모두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습니다.

108. 기초연금을 최저생계비 수준(20만원 → 4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기초연금의 지급액은 제도 도입 당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국회 여야정 협의체, 국회 본회의 의결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사항 (10→20만원으로 2배 인상), 5년마다 적정성 평가를 통하여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40만원으로 인상 시 막대한 추가적 재정 소요 발생 할 것임

더불어민주당	기타	기초연금 인상 필요. 당장 최저생계비(1인 64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데는 무리가 따르므로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국민의당	기타	노인층 모두에게 최저생계비 수준인 4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필요함. 다만 국가 재원을 고려하려 선별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음. 즉 일정 재산 소유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차감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또한 복지전달체계 과정에서 중복 등 재정손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보완이 있어야 함.
정의당	기타	기초연금액 2배 인상은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재설계를 요구하는 정책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노후소득보장은 어느 수준이 적정하고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 것인지 보다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후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최저생계비 문제입니다.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에 놓여 있어도 연락조차 닿지 않는 자녀가 있으면 최저생계비 지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입니다. 2010년 기준만으로도 117만명에 해당합니다. 사회부양이라는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109. 기초연금과 보육료는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p>(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써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함께 부담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실제로 현재 기초연금의 국고부담율은 약 75% 수준으로 대부분의 재정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국고부담율이 증가하도록 이미 설계되어 있음</p> <p>(보육료) 영유아보육지원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공동책임으로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에 재정부담의무를 부과하고 있음</p>
더불어민주당	찬성	초연금, 보육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면서 예산 부담이 큰 복지사업은 정책과 예산을 중앙정부가 일괄 담당해야 함
국민의당	찬성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행복의 집임. 국가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과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는 필요함. 다만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함.
정의당	찬성	기초연금, 보육료, 기초생활보장 등 전국민적 소득보장에 해당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일괄 책임져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예산 및 업무구분이 필요합니다.

110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축소하고, 그 재원으로 수급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써, 소득 활동 등을 통한 자활·탈수급이 아닌 강제적인 대상자 축소는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한정시켜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소수의 수급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경우, 수급자는 그 혜택에 안주하는 것이 유리해지고, 비수급자 역시 자립보다는 수급자가 되고자 하는 유인이 높아져 사회적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임.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대상자에 대한 수급 수준 인상보다는 개별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더불어민주당	반대	현재에도 비수급 빈곤층이 100만명 이상이 되는 등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늘려야 함
국민의당	반대	가난한 사람의 것은 떼어 더 가난한 사람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은 미봉책임. 오히려 부유세를 신설하여 이를 재원으로 하여 극빈층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의당	반대	절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2010년 기준으로 117만명입니다.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 현행 상태에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축소시키는 것은 절대 빈곤에 놓여 있는 국민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또한 수급 수준은 수준대로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합니다.
--	--	--

111. 국민연금기금 안정을 위해 납부액을 인상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시기 및 인상폭 등은 사회적 합의 필요
더불어민주당	기타	납부액 인상에 앞서 국민연금 재정 추계의 신뢰성 제고 및 제도 운영방식·장기재정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국민의당	반대	현재 경제 불안 속에 저성장세가 이어져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임.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역가입자 등은 현재의 수준도 버거운 상황임. 이에 따라 납부액 인상은 국민의 반발만 초래하고 실적도 저조할 것임
정의당	기타	국민연금 급여 수준 인상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납부액 인상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의 운영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문제입니다.

112.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임신·출산 시 드는 의료비는 2018년까지 본인부담 5%로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급여 진료를 포함한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제도(국민행복카드, 50만원/1인 (*다태아 70만원))를 시행중으로 본인부담은 매우 낮은 수준임
더불어민주당	찬성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출산관련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는것이 바람직
국민의당	찬성	현재의 저출산을 극복해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됨. 인구절벽을 앞둔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여성이 행복해야 출산율이 높아질 것임.
정의당	찬성	정의당은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미용성형 등의 목적만 제외하고 모든 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13. 암 같은 중증질환은 국가가 무상으로 진료해야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고액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하여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항목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한도 이상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무상 진료를 위한 소요 재원은 높은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므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의 경제여건, 국민정서 등을 고려할 경우 단계적인 보장성 확대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더불어민주당	기타	완전 무상의료보다는 본인부담금을 최소화(본인부담상한 기준액의 대폭적인 조정)를 통한 중증질환에 대한 국민의료비 부담완화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국민의당	기타	암은 국민의 30%가 반드시 걸리게는 되는 일종의 국민병임. 국가가 모든 중증질환에 대해 무상으로 진료

		하는 것은 이상적임. 그러나 의료보험액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정의당	찬성	정의당은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미용성형 등의 목적만 제외하고 모든 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14.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경쟁할 수 있도록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은 기본 이념, 체계가 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 모든 국민과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개개인의 위험률과 상관없이 소득수준 등에 따라 보험료 납부 - (민간보험) 가입여부가 개인적 선택(민간보험회사와 개인 간 사적 계약)에 맡겨져 있고 개개인의 건강 위험률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에 근거해 보험료를 납부 ○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으로서, 민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 따라서, 경쟁이나 대체의 관계가 아님 * 1970년대 민간의료보험 도입 당시에도 공보험의 보충적 역할로 도입되었고, OECD 국가에서도 민간보험이 보충적 역할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의료 보장성을 확장해 나가고 있음 ○ 앞으로 국민들이 큰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더불어민주당	반대	민간보험의 활성화는 의료의 영리화를 가속화하고 공적보험의 부담을 증가시켜 공보험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며, 오히려 과도한 민간의료보험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공보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의료보험법 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국민의당	반대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임.

		국가의 고유 책임을 민간보험에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임. 상호보완적, 선별적 유지가 바람직함.
정의당	반대	한국의료패널(2012)에 따르면, 전국민의 74.3%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 1인당 평균 월 83,854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인구에 적용하면 무려 50조원에 이르는 규모로 국민건강보험 재정(42조원, 2012년)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가 1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109.4만원의 혜택을 받는 반면, 민간보험은 평균 57만원~82만원의 혜택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키우는 것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는 길입니다.

115. 의료사고 분쟁 시 의료진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p>의료분쟁조정법 제정 과정에서 입증책임전환에 대해 민법상 원칙 위배를 이유로 폐기(17대 국회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입증책임전환에 대한 이견 으로 소위 회부 후 자동 폐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후 대안으로 객관적인 감정이 가능하도록 감정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입증책임전환에 찬성하기 어려운 입장 - 입증전환시 소송 급증이 예상되어 사회적 비용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더불어민주당	기타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실제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정보접근권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환자입장을 고려하여 ‘입증책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함. 다만 현행 분쟁조정중재제도 하에서 강제조정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의료분쟁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추세를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보여짐.
국민의당	찬성	의료사고의 원인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함. 환자나 가족이 문제제기가 있으면 반드시 의료진을 무과실을 입증해야 할 것임. 이것은 정의증명의 원칙에 해당함.
정의당	찬성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심각한 정보비대칭이 존재함

		니다. 환자는 의료사고 분쟁시 정보비대칭 문제로 인해 이를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	--	--

116.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비만세를 도입해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실효성, 식품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부담금 신설에 대한 국민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현재 부담금은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반대	소위 죄악세로 불리는 사회적 조세의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질병이나 사고, 피해를 야기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세와는 달리 소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부작용도 존재함. 비만세의 신설보다는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식품들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및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통한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국민의당	기타	비만은 국민건강에 치명적임. 비만의 원인을 제공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제제가 필요하나 비만세 도입이 물가인상 등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정의당	반대	해당 식품을 특정하기 어렵고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발생할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17. 간병비 부담이 없고, 보호자나 간병인을 대신해 전문 간호인력이 24시간 간병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모든 공공병원에 전면 실시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간병 부담을 줄이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서 제공기관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필요 - 개정 의료법('16.9월 시행)에 따라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특히 공공병원에게 서비스 제

		공이 의무화될 예정 - 다만, 지방 중소병원(공공병원 포함)의 간호인력 구인난, 초기 시설 개설 투자 등을 감안하여 병원이 판단하여 병동 단위 자율참여 방식으로 확대 하고 있 음
더불어민주당	찬성	우리당의 핵심공약이자 대표적인 의료분야 정책임. 이미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추진부터 포괄간호서 비스를 거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무적용까지 추진 해 왔음.
국민의당	찬성	가족 중 한 사람이 입원하게 되면 모든 가족이 매우 힘들게 됨.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또 다른 문제를 파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포괄간 호서비스를 전면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다만 서민들 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
정의당	찬성	병원비 부담 중 환자들과 가족이 크게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간병비입니다.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간 병서비스가 환자와 가족에게 전가되어 있습니다. 간 호인력을 확대하고 간병서비스를 공공병원에서라도 전면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118. 급격한 전월세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상한제 도입시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가격이 크게 상 승할 가능성이 크고, 장기적으로는 수익성 악화 및 불확실성 가중 등으로 임대용 주택 소유를 기피하게 되어 주택거래 감소 및 주택공급 축소 가능성이 커지 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됨
더불어민주당	찬성	임대시장에서의 갑질에 따른 피해를 조정 구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수단임
국민의당	기타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음. 이를 제한하기 위해 상한제를 도입 하는 것은 바람직함. 그러나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일 방적으로 규제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 공급 확대를 겸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임
정의당	찬성	분양가자율화 이후 나타난 집값거품은 전월세 가격

		<p>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2005년 이후 2배 이상 상승,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수준임. 하지만 전월세가 급등에 대한 정부 대책은 선심성 저리대출과 거품 낀 고분양 아파트 매매독려에만 그칠 뿐 근본적인 가격 하락에는 무대응으로 일관. 전월세 상한제는 민간임대시장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전월세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미 선진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음. 주택은 공공재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정상적인 주택가격 및 전월세 가격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 대책은 반드시 필요함. 정부와 집권여당 등은 전월세상한제를 사유재산권 침해로 반대하지만 이는 지금의 비정상적인 시장을 방치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인정해주자는 것 밖에 되지 않음.</p>
--	--	--

119.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기간 보장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p>결과적으로는 전월세상한제 도입 시와 동일한 부작용 발생할 것임. 또한, 계약갱신청구권만 도입한다면 다수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 하기 위해 공정임대로 등 다른 방식의 임대료 규제 도입이 불가피하는 등 시장교란이 발생할 것임</p>
더불어민주당	찬성	<p>임대시장에서의 갑질에 따른 피해를 조정 구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수단임</p>
국민의당	기타	<p>도입 취지는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은 일종의 청구권이지만 권리로서의 성질도 뚜렷하지 않고 건물주가 그에 응하지 않으면 갱신의 효력은 생기지 않을 수 있음. 나아가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어 보임.</p>
정의당	찬성	<p>전월세 가격 안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같이 도입되어야 함. 전월세 가격을 제한해도 갱신이 안 되면 효과가 없음.</p>

120.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최우선변제금 범위와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
--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최우선변제금을 확대해야한다는 취지에는 동감 하나 최우선변제금 확대시 서민주택금융에 미치는 영향(LTV에서 최우선 변제금주담대에서 최우선변제금만큼 제외 후 대출) 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
더불어민주당	찬성	‘을’인 세입자 주거권 보장
국민의당	찬성	최근 부동산 전월세금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우선변제금도 그 범위와 금액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세입자의 주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전세금의 50%까지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정의당	찬성	현재 최우선변제금은 서울시의 경우 임차보증금 9,500만원 이하에 대해 3,200만원까지 변제받을 수 있음. 하지만 서울 평균전세가가 2.9억원임을 감안할 때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소수에 불과. 근본적으로는 전월세가격 하락에 따른 세입자 피해방지 등을 고려한 전세보증보험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함.

121. 소득 하위 4.3%에 불과한 주거보조비를 20%까지 늘려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주거급여(주거보조비)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20%까지 확대 시 대규모 추 가 재정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동반되어야 할 것. 또한, ‘15.7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개편으로 인해 주거급여 대상가구를 대폭 확대(중위소득 33%→43%)한 바 있음
더불어민주당	찬성	주거취약계층의 생존권 차원의 주거권 보장
국민의당	찬성	최근 전월세 상승으로 인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에 부담이 커졌음. 이를 다소 완화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주거보조비를 늘려주는 것이 필요함. 다만 국가재정의 효율적 배분이란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 후 인상폭을 정할 필요가 있음.
정의당	찬성	2014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가 133만명,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은 29%, 서울시

		주거비 지원 대상 가구의 주거비는 월 30~50만원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 정부의 주거지원 대상 및 지원액의 상향과 저렴한 공공주택 확충을 통한 주거불안 해소가 절실함.
--	--	---

122. 5.2%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인 11.5%까지 확대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찬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
더불어민주당	찬성	장기공공임대는 5.05% 수준이며 10-15% 수준으로 공급량을 늘려야 함
국민의당	찬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상의 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임. 이 방안이 다른 것보다 실효적이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최대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임.
정의당	찬성	우리나라 무주택자는 750만 가구 이고, 저소득층(소득 하위 40% 이하) 중 334만 가구가 임대주택에 살고 있음. 여기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98만 가구, 고시원·쭉방·반지하·옥탑방 등에 거주하는 가구가 50만 가구 등을 고려할 경우 현재의 100만 가구에 불과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OECD 국가의 평균 수준까지 확대해야 함.

123. 임대차시장 관리를 위한 임대차등록제를 의무화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는 '14년 2.26 임대소득 과세 방안처럼 임대사업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에 신중할 필요
더불어민주당	찬성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세입자의 주거선택권을 강화
국민의당	찬성	임대료 등 신고 의무화로 세입자 보호를 골자로 한 월세계약 등록제 도입은 타당하다고 여겨짐. 다만 임대인의 기피와 임대료의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원리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보다 실효적일 것임.
정의당	찬성	세입자 650만 가구가 민간임대시장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고작 68만 가

		구에 불과함. 불투명한 임대시장은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 등의 불로소득으로 이어지는 만큼 임대차등록제 의무화로 임대시장을 투명화해야 함.
--	--	--

124.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근로소득 등 여타소득과의 형평, 전월세시장에 미치는 영향, 세입자에게의 세부담 전가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
더불어민주당	찬성	부동산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받아온 것이 사실인 바, 과세를 강화해야한다는 근본적인 입장에 동의, 임대소득도 근로소득,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내야 하며 특히 임대소득은 불로소득적 측면이 강함
국민의당	찬성	임대소득자에게 주택공급의 확대와 안정을 위해 비과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오히려 임대료가 급증하면서 이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그러나 풍선효과 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정의당	찬성	전월세 보증금과 임대료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한 정상과세는 전월세가격의 상승을 방지하고, 불로소득을 근절할 수 있는 조치임. 하지만 정부는 3주택자(85㎡ 이하, 3억원 이하) 조차 3016년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000만원 이하 월세소득은 분리과세하는 등 임대소득 과세정책을 후퇴시키면서 다주택자와 부동산 부자의 임대료 착취를 조장하고 있음.

125. 부동산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시세로 반영해 과세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공시가격은 시장가치를 적정히 반영하는 것이 타당. 다만 공시가격을 시세로 반영하는 경우 급격한 과세부담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시장가치를 점진적으로 반영함이 바람직
더불어민주당	찬성	공시지가를 시세로 반영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100% 시세로 반영할 경우 공공개발, 수용 등에서 토지보상비의 과다한 지출로 예산낭비가 초래될 수 있고, (투기 등에 의한) 지가상승을 모두 인정해주는 불합리도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시세반영이 타당
국민의당	반대	부동산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대체로 시세의 25~50%를 반영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 시세를 평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평가를 했다고 해도 적정성의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시세를 반영한 과세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으로 분석됨.
정의당	찬성	부동산 가치에 맞게 과세하는 것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임. 하지만 정부는 '적정가격'이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시세(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을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으로 산정고시 해 왔으며, 아파트와 단독, 상가및업무용 빌딩, 토지 등의 시세 반영률은 서로 다르게 책정하며 형평성조차 상실했음.

126.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후분양제는 사전에 사업주체가 건설자금 전부를 조달하여 주택을 건설하 여야 하는데, 현재 주택건설업자의 재정여력 부족, 금융권의 미분양 우려로 인한 대출 기피 등을 감안할 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더불어민주당	찬성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경우 소비자인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후분양제도 도입해야 마땅
국민의당	기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주택을 완성한 후에 분양하는 후분양제임. 그러나 건축업자가 수천억에 해당하는 건축비를 마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주택공급의 축소를 가져오게 됨. 더구나 주택완공 후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으면 건설업자들의 줄도산이 나올 수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파생할 우려가 있음. 이의 보완을 통한 적정분양제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정의당	찬성	주택을 완공 후 판매하는 것은 시장원리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자율화 이후 선분양 특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 후분양이 되면 건설사간 잘 짓기 경쟁을 유도하면서 주택의 품질 제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가능해짐. 또한 건설사들의 철저한 사업성 검토에 근거한 적절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고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도 가능해지면서 하우스 푸어도 방지할 수 있음.
--	--	---

127. 민간의 과도한 분양가를 규제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재도입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주택시장의 자율성 제고 및 시장정상화 차원에서 현행 유지 필요
더불어민주당	찬성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나 분양가격이 실건축비에 비해 과도하게 높으므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가격규제 불가피
국민의당	기타	천정부지로 오르는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분양가상한제의 도입은 의미가 있었음. 그러나 이의 부작용도 있어 폐지되었음. 지금 시점에서 재도입의 필요성도 있지만 이의 방법이 최상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즉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규제보다는 주택의 다양한 공급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정의당	찬성	집값안정을 위한 강력한 분양가 규제는 필요함. 박근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강남권에서는 평당4천만원대의 고분양 아파트가 공급되며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음. 집값거품은 월급쟁이의 내집마련을 꿈을 앗아가고, 양극화의 주범인 만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강력한 분양가 규제로 고분양을 근절해야 함.

128. 선분양제 하에서 분양 주택의 분양원가를 세부항목까지 공개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확정되지도 않은 비용을 세부적으로 공시하는 것은 업계의 부담으로만 작용
더불어민주당	찬성	분양가격이 실건축비에 비해 과도하게 높으므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세부항목 공개 적극 찬성
국민의당	찬성	사실 모든 물건의 원가공개와 적정이윤을 붙여 매매가가 제시되어야 시장이 투명성이 높아짐. 이를 위해

		서는 보다 정교한 원가산정 방법이 도입되어야 함. 자재가는 공개된 것이지만 설계나 시공사의 노하우, 건설인력의 숙련도 등은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움.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안정화, 적정화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과 대안이 필요함.
정의당	찬성	지금의 분양가는 토지매입비, 건축시공비, 적정이윤 등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책정되면서 소비자의 부담을 키우고 건설사에게는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음. 정부와 업계는 시장경제에서 원가공개는 맞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선분양제라는 반시장적 특혜는 누리면서 원가공개를 반대하는 것이야 말로 공정하지 않음. 더군다나 이윤까지 축소·허위 신고하면서 건설사들의 탈세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원가공개는 거품없는 주택가격 산정, 소비자 권리 보장, 건설시장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129. 아파트 입주 전 분양권을 매매하는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전면적인 전매행위제한은 주택시장을 위축시키고 자율성 저해하는 등 과도한 규제
더불어민주당	찬성	부동산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실수요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분양권전매 금지 타당
국민의당	찬성	분양권 전매는 실수요자의 입주권을 제한하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의당	찬성	입주 전 분양권 매매 허용은 주택을 투기상품화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꾼들의 주택거래를 유도, 주택 가격의 거품을 조장함.

130. 주거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서민, 청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행복주택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되,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도 계획대로 추진
더불어민주당	반대	뉴스테이가 정부의 공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구실이

		돼서는 안됨. 다만 뉴스테이도 준공공임대 성격이 강하므로 보조적 수단으로 유지할 필요
국민의당	기타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은 신중해야 합니다. 민간이 운영할 경우 임대료 상승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해당기업에 대한 특혜시비 등 불공정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많습니다.
정의당	반대	뉴스테이는 서민주거안정이 아닌 재벌건설사 특혜책에 불과함. 임대료는 뉴스테이 임대료는 너무 비싸(서울 신당동 23평 기준 보증금 1억, 월임대료 50만원) 저소득층이 입주하기엔 매우 어려움.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뉴스테이 확대를 중산층 주거안정을 이루겠다며 뉴스테이 사업자인 재벌 건설사에게 택지, 재정, 세제 등의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음. 중산층의 주거불안은 집값 거품제거를 통해 해소해야 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은 뉴스테이가 아닌 저렴한 장기공공주택 확충과 주거비 지원으로 해소해야 함.

131.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강화해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LTV·DTI 규제는 부동산시장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시행될 필요
더불어민주당	찬성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하우스푸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해야 함.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우려
국민의당	찬성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대폭적인 강화는 어렵더라도 향후 점진적으로라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의당	찬성	정부의 거품 낀 주택 매매 독려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면서 가계살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특히나 상환능력을 고려치 않은 무분별한 대출은 서민가계까지 빚쟁이로 내몰면서 집값 거품을 떠받치겠다는 것과 다름없음.

132. 재개발·재건축의 개발이익환수를 강화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현재도 기반시설 기부채납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사실상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다수의 정비사업이 정체 중에 있어 개발이익환수를 강화할 경우 사업 추진이 매우 곤란해 질 우려가 높음
더불어민주당	찬성	개발이익은 공공행위 내지 재정지출에 따른 사회적 이익의 발생이므로 사적 귀속을 막고 환수해야 마땅
국민의당	찬성	재개발 이익의 환수를 강화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환수이익을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개선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의당	찬성	재개발·재건축이 대부분 용적률 완화, 층고완화, 개발에 반대하는 가구의 사유재산권 침해, 세입자 주거권 침해 등의 특혜를 국가가 제공하면서 진행되는 만큼 개발이익의 50%는 공공이 환수해서 주거안정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133.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금지하고 공영개발 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공공택지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개발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로서, 원칙적으로 민간매각을 통해 개발됨.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공동주택의 수급조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만약 민간매각을 금지한다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근간을 훼손. 다만 취약 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은 공영 및 민간건설로 공급 중
더불어민주당	찬성	공공택지 민간 매각은 정부, 지자체의 주거에 대한 공적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이므로 공영개발에 주력해야 함
국민의당	기타	향후 공공택지 개발 자체를 자제하고 기존 주택단지에 대한 공적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정의당	찬성	공공택지는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 수용해서 조성된 땅임. 그럼에도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이 전면개발하지 않고 민간매각하여 땅장사로 이득을 챙겨왔고, 재벌건설사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를 고분양하는 집장사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겨왔음. 지금이라도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전면 금지하고 공영

		개발하여 공공주택을 확충하고 공공토지 비축을 강화해야 함.
--	--	----------------------------------

134. 저출산 대책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찬성	현재도 저출산 추세 완화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일정비율을 소득이 낮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우선·특별공급중(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 국민임대 30%, 5년·10년 공공임대 15%(민간의 경우 10%) 등
더불어민주당	찬성	주거비가 저출산의 주요원인 중 하나이므로 공공임대 우선 배정 등 정책수단 필요. 더민주당은 1/3을 신혼부부에게 배정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함
국민의당	찬성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공급은 국민의당 공약입니다.
정의당	반대	저출산 대책은 집값거품 제거, 좋은 일자리 창출, 여성의 경력단절 근절, 무상교육 확대 등 종합적인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음. 특히 지금처럼 공공주택 재고율이 5%에 불과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무주택가구, 한부모 가정, 철거민 세입자 등 스스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제공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지금도 신혼부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OECD 평균 수준만큼의 공공주택이 확충된 이후에는 신혼부부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에게도 공공주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135. 부동산 가격하락은 국가와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급격한 부동산 가격하락은 하우스푸어 양산 및 내수 둔화 등 문제 우려
더불어민주당	반대	부동산가격하락은 양 측면이 다 있음. 부동산 거품의 제거로 무주택서민의 경우 내집마련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또한 공공개발의 토지분 부담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 기업의 부동산 투자비 경감 등 긍정적 측면 있음. 반면 급격한 부동산 가격하락은

		하우스푸어의 급증으로 제2의 서브프라임사태 우려
국민의당	기타	과도한 부동산가격 하락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금융기관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의당	반대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분양가자율화 이후 선분양 특혜,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불로소득 허용 등에 의해 가파르게 상승한 결과로 평균 30% 이상이 거품임. 따라서 거품제거를 통해 부동산가격을 정상화해야 함. 거품이 제거되면 전월세가격도 안정화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고, 상가임대료도 하락해서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임. 무엇보다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면서 다주택자, 부동산부자와 서민 간 양극화가 해소되면서 사회적 갈등도 줄어들 것임. 분명히 투기를 일삼아왔던 재벌 건설사, 다주택자와 부동산부자에게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위기일 것임. 하지만 땀 흘려 일하며 살아온 서민에게는 기회이며, 장기적으로는 내수경제 활성화에 따른 건전한 국가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

136. 주거안정을 책임질 주거복지청을 신설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공공임대주택 재고 증가(117만호, '17년말),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서비스 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주거복지 정책 조직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함. 다만,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와의 정책 일관성, 부가 갖는 업무조정능력 및 위상을 감안시 별도 청 신설 보다는 국토부내 주거 복지전담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더불어민주당	찬성	850만가구가 무주택인 상태에서 별도의 주거담당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 다만 청으로 할 것인지 기존 기구를 강화할 것인지 등은 숙고해야 할 문제
국민의당	반대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미 있는 관련부서들의 기능을 통폐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찬성	재벌대기업만 바라보며 토건업자를 위한 정책만 양산하는 지금의 국토부 정책으로 서민주거안정은 요원함. 주거안정은 대한민국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주거복지이며, 주택정책은 건설경기 부양 수단이 아닌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따라서 국토부를 해체하고 주택정책을 복지부로 이관하되, 복지부내에 주택정책을 전담하는 주택청(주거복지청)을 설립해야 함.
--	--	---

137.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정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신중 검토)모든 산업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와 별도로 건설산업에만 적정 임금제를 추가 도입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할 필요. 우선 타 산업근로자와의 형평성, 사업자 부담 정도, 정부 재정지원 여부, 적정 임금 기준 적정성 등 우려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
더불어민주당	찬성	건설근로자의 부당한 저임금(착취) 구조 개선
국민의당	찬성	공정임금제는 국민의당 노동공약입니다.
정의당	찬성	건설근로자들은 저임금 뿐 아니라 부도로 인한 임금 체불에 시달리고 있음. 몽땅하청, 불법다단계 하청을 거치면서 건설노동자 임금이 깎여나가면서 노동착취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근본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선진외국에서는 사무직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동절기(장마기)등에는 교육 훈련 수당을 제공하면서 건설노동자를 숙련된 기술을 가진 기능인으로 양성하고 있음. 이러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건설노동자도 당당한 내수시장의 소비주체로서 젊은이들의 일자리로 자리잡았음.

138. 공공건설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아닌 직접시공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신중 검토)원수급자 책임시공 및 부실업체 퇴출 측면에서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직접시공을 전면 확대하는 것은 생산체계(종합-전문)와 대치되는 측면이 있고, 실제 직접 시공을 위한 기술·인력 등을 모두 갖춘 건설업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 확대 추진 시 위장직영, 불법하도급 등 부작용 우려

더불어민주당	찬성	다단계하도급에 따른 문제 개선. 반면 전면시행은 일부 문제점 있음
국민의당	기타	하도급을 금지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실시공 및 단가 혼선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도급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의당	찬성	직접시공제는 건설노동자가 원도급자인 건설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몽땅하청에 따른 노동착취를 방지할 수 있음. 우리나라 재벌건설사는 모두 건설노동자를 한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음. 이는 정부가 직접시공제를 의무화하지 않으면서 재벌건설사의 불법다단계 하청을 방조하기 때문임. 선진외국은 직접시공제가 의무이며 건설인력 없는 건설사는 브로커로 공공사업을 수주할 수도 없음.

139. 사회기반시설 건설 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운영수입(위험공유형:BTO-rs, 손익공유형:BTO-a)은 보장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국가재정조달능력의 한계를 감안하면 민간자본 유치가 필요하지만 보장형 태보다는 지금보다 좀더 사업성있는 사업을 민자유치형태로 발굴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
더불어민주당	기타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을 위해 필요는 하나 국가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국민의당	기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는 투자금 회수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제는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정의당	반대	민자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은 '99년 도입 이후 수십조원 혈세낭비의 주범으로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경실련)에서도 수차례 MRG에 의한 예산낭비 사례들이 제기되어 왔음. 감사원도 정부가 MRG 보조금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민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함.

140. 예산낭비 원인인 정부의 표준품셈(자재비·노무비·장비비·가설비·일반경비 등 1천4백30개 항목의 가격 고시)을 폐지하고, 시장단가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시장단가 적용 확대는 상당부분 바람직하나 건설공사의 비정형성, 현장성, 시장단가 책정의 신뢰성 문제 등으로 인해 시장단가적용이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표준품셈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더불어민주당	찬성	시장단가 확대 적용이 바람직
국민의당	기타	표준품셈제도가 예산낭비의 원인이라면 당연히 폐지해야 하지만 중소기업 등을 보호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정의당	찬성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단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표준품셈은 공사비를 부풀려 건설사에게 특혜를 주고 국민혈세를 낭비시키는 주범임. 정부도 문제를 인정, 96년에는 실적공사비 도입을 법제화하였고, 매년 적용대상을 확대해왔지만 건설업계 등 토건세력의 반발로 후퇴되면서 박근혜 정부는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을 배제하였음. 최근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표준품셈 기준을 거부하고 시장단가제 적용확대를 선언하였음. 지금이라도 잘못된 표준품셈을 폐지하고, 시장단가 적용 확대로 예산낭비를 줄여야 함.

141. 부동산 담보범위 내에서 책임지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대출금액 상환시 집 등 부동산만 반환하면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음)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재원 등 제한된 여건으로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점차 확대 해야 함
더불어민주당	찬성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라고 판단함
국민의당	기타	유한책임대출의 경우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자칫 금융시장에 대한 파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찬성	주택담보대출이 대출자의 신용이 아닌 주택의 가치를 담보로 이루어진 만큼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은행권의 신중한 대출관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비소구대출 확대가 필요함.
--	--	--

142.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린벨트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제도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상존하나, 그간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확산 방지, 녹지축 확보, 환경개선 효과, 개발 가용용지 확보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향후 기후변화, 도시질적 성장 강조 등 환경변화에 따른 계획적, 친환경적 도시관리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될 전망이므로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며, 규제완화 등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
더불어민주당	반대	그린벨트를 대폭 푸는 것은 환경파괴 등 문제가 있음. 다만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것에 찬성함
국민의당	반대	그린벨트 완화는 반대합니다. 오히려 그린벨트로 인해 재산상의 침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반대	그린벨트는 후손과 미래를 위한 도시관리, 환경보호 등의 측면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함. 그리고 과거 전두환 정권시절까지는 그린벨트가 엄격하게 관리되면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까지 제기되어 왔음. 하지만 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부양 수단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일삼으며 그린벨트를 원칙없이 해제, 그린벨트가 투기 대상이 된지 오래임. 지금이라도 그린벨트의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개인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면 투기여부를 판단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되, 토지선매권제를 도입하여 공공의 토지비축을 강화해야 함.

7. 소비자 등 기타분야

143.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여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찬성	공공요금은 서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으로서, 서민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공기관이 경영개선을 통하여

		원가절감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 다만, 노후 시설 개보수 및 확충, 서비스개선을 위해 원가내 비용 보전은 고려 필요.
더불어민주당	찬성	중산층·서민 경제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당	찬성	공공요금의 인상은 신중해야 합니다.
정의당	찬성	공공요금을 인상해야 할 적절한 사유가 있다면 인상할 수 있으나 이미 상당수의 공공요금이 인상되어 물가를 끌어올려왔음. 공공요금 인상은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억제해야 함.

144. 공공요금의 원가공개가 필요하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찬성	정보비대칭성, 공공요금 원가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기관이 요금인상을 위한 원가 부풀리기 등을 시도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원가 공개는 필요. 다만, 과도한 수준의 원가 공개는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기관의 영업비밀 보호를 모두 충족하는 수준에서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
더불어민주당	찬성	공공물가의 투명성 확보
국민의당	찬성	공공요금의 경우 원가를 공개해도 영업상의 기밀이 누설되지 않을 것이며 소비자는 당연히 알권리가 있습니다.
정의당	찬성	공공요금의 원가공개는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 공공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면 원가상승요인에 대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45.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정부가 인허가 하는 주요 통신사의 통신요금 정보 등을 공개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통신요금 관련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정보공개소송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대법원의 판결결과와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더불어민주당	찬성	통신요금은 이미 공공요금과 같은 준조세적 위치에 있으므로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할 하는 것이 당연함. 또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로 1·2심재판에서 공개하

		도록 판결(더불어민주당 공약)
국민의당	찬성	적극 찬성합니다.
정의당	찬성	통신비 지출이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통신서비스 사업이 독과점 구조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 마케팅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점, 또 이로 인해 통신요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다는 점에서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정의당은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음.

146.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유통법시행으로 그동안 문제가 된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이용자차별행위는 줄어들고 요금인하 등의 효과가 발생됨. 따라서 일몰이 되는 2017년 9월 시행결과를 토대로 법률의 존속여부를 검토가능함
더불어민주당	찬성	단통법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 경감이 아닌 통신사업자의 수익 증대의 토대가 되었고, 반면에 판매점들은 매우 어려운 지경에 놓였음. 따라서 통신비 인하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단통법은 전면 개정이 필요함(더불어 민주당 공약)
국민의당	찬성	단말기유통법은 소비자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의당	찬성	단말기유통법은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일부 개선시킨 것 이외에는 단말기 가격 인하와 통신비 가격 인하에서 여전히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오히려 휴대폰 제조사들과 이동통신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음. 따라서 기본요금제 폐지, 공정한 통신비 산정제도 도입, 통신원가 공개 등이 필요함.

147.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인터넷 게시물을 차단하는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무분별한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의 확산성을 감안하면 임시조치는 필요 하며, 표현의 자유도 보장할 가치가 있는 범위내에서 존중되어야함
더불어민주당	찬성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사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임시조치는 중단되어야 인터넷상

		익명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음(더불어민주당 공약)
국민의당	찬성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즉시차단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의당	찬성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명예나 사생활을 이유로 내려달라는 요청이 올 경우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는 공익성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이 게시중단 요청만 하면 해당 게시물을 내리도록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무엇보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온라인 공간의 신뢰와 소통을 차단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함.

148.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를 완화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완화할 필요성도 있으나 개인정보 정의 및 비식별화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보호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빅데이터 산업의 요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할 필요
더불어민주당	반대	개인정보보호는 산업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서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함. 따라서 철저한 개인정보보호의 기반위에서 빅데이터산업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함(더불어민주당 공약)
국민의당	반대	개인정보 보호는 우리사회가 지켜야 할 기본의무입니다.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정의당	반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사전동의 제도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

149.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시민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선해야 한다.
--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자유롭게 변경을 허용할 경우 주민등록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주민등록 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더불어민주당	찬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더불어민주당 공약)
국민의당	찬성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찬성합니다.
정의당	찬성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는 과도한 개인정보가 수록되는 문제를 안고 있음. 최근 헌재 결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었으므로 주민등록법이 개선되어야 함. 아울러 주민번호 제도 자체의 개혁이 필요함.

150.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는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폐지하고, 운전면허, 사회보장, 의료 등 목적별 번호를 각각 부여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반대	주민의 거주관계 등을 등록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유지는 필요함
더불어민주당	찬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더불어민주당 공약)
국민의당	찬성	국민의당은 한국형사회보장카드의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정의당	찬성	주민등록번호는 성별, 연령, 출생지를 유추할 수 있는 문제와 함께 여러 개인정보를 연결시키는 축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 이미 여러 차례 주민번호 유출 문제가 발생한 바 있으므로 주민번호 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함.

151. 결함 또는 하자가 있는 자동차의 손 쉬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한국형 레몬법 제정 등)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찬성	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
더불어민주당	찬성	
국민의당	찬성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적극 찬성합니다.
정의당	찬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함. 일정 기간 안에 일정 기준 이상의 수리를 받는 경우 제조사가 차를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함.

152.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통해 세월호 진상조사기간 연장 및 특조위에 권한을 강화해야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기타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기한연장과 권한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 여야합의로 추진 필요
더불어민주당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로 특조위가 공전되어 오다 2015.8.4일 사무처구성 및 예산 배정으로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이 전개되고 있어, 실질적 조사 활동 시점을 '15.1.1일 아닌 '15.8.4일을 기점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인 것임 - 이에 개정법(새정치민주연합 의원발의 중)을 통해 세월호 선체인양 후 선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기간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취지에 합당하다고 봄 - 지난해 11월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수부가 “세월호 참사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이라는 문서를 통해 BH 조사 관련 사항에 대한 행동지침을 세월호참사 특조위 여당추천위원들과 심지어는 여당에게 조차 내려 특조위의 진상조사권을 훼손하고 있음 - 세월호참사의 진상조사권은 독립기구인 특조위의 고유 권한이며, 해수부의 행동지침은 특조위의 진상조사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임을 분명히 경고함
국민의당	찬성	현행 특별법으로는 충분한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사기간 연장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에 찬성합니다.
정의당	찬성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정부의 비협조, 법률상의 미비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특조위 활동 보장, 인양 선체 정밀조사 등 업무권한 확대 및 구체화, 활동개시 및 종료시점 명확화, 국가기관의 협조 의무 강화 및 예산에 대한 협의권 강화, 4.16재단 설립 지원, 조사방해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보장 등이 필요함.

153. 청년 지원대책을 주 골자로 하는 청년기본법을 신설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새누리당	찬성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고용분야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한 기본법 제정도 긍정적으로 판단. 다만, 여성·장년 등 다른 대상별 기본법 제정과의 형평성 여부는 고려할 필요
더불어민주당	찬성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총괄 법안으로 김광진의원외 기재위에 법안 제출
국민의당	찬성	청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부재, 정책적 혼선을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청년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의당	찬성	청년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청년 대상 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청년기본법이 필요함. 청년기본법은 선언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정책결정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등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임.